
완전히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

도정4개년계획 2019 점검보고서

2020. 01.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1부. 도정운영의 환경적 동향과 점검경과

- 1. 도정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동향 5
- 2. 2019년 하반기 도정과제 이행 점검보고서 작성경과 12

2부. 목표 및 전략별 점검

- 1. 다시 뛰는 경남 경제 17
- 2. 사람 중심 경남 복지 32
- 3. 함께 여는 혁신 도정 46

3부. 6대 중점과제 점검

-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55
- 2.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58
- 3.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60
- 4.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62
- 5.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64
- 6.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67

4부. 참고사항

- 1. 과제별 전담부서 및 협력부서 현황 71
- 2. 2019년 제안과제 반영 현황 74
- 3. 도정자문위원회 신규제안과제 76
- 4. 도정자문위원회 운영 77

제1부

도정운영의 환경적 동향과
점검경과

1 도정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동향

■ 정치적·행정적 동향

●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복귀

- 김경수 지사는 일명 ‘드루킹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받는 도중 2019년 1월 30일 법정 구속되어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로 도정이 운영됨. 다행히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보석 결정을 받게 되어 4월 17일 도정에 복귀하게 됨.
- 4월 17일 도정의 복귀로 77일간의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 벗어나 도정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나 여전히 재판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정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음의 도지사 도정수행능력평가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상당기간 동안의 도정 공백으로 정치적 에너지의 원천인 도민들의 도정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도정수행능력 평가

- 도지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변화를 지향하면서도 안정적인 도정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김경수 지사는 한국갤럽이 2018년 9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장의 도정수행능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김경수 도지사는 일명 ‘드루킹’사건으로 정치적인 입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의 평가는 긍정 49%, 부정 22%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음.
- 그러나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음이 39%, 잘못하고 있음이 39%로 나타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하락하였음. 연령별 지지에 있어 20대에서 40대까지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에 비해 높았으나 5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지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40대는 50%가 잘하고 있음, 35%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40대에서 비교적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2019년 하반기(7월-12월)를 대상으로 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상반기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조사됨. 즉, 김경수 지사에 대한 경남도민의 평가는 2019년 상반기 긍정률이 39%였으나 하반기에는 44%로 상승하였고, 부정률은 39%에서 33%로 하락하였음. 특히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에서 잘하고 있음 50%, 잘못하고 있음 25%로 나타나 청년층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김경수 도정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지지를 넓혀가면서 도민의 생활에 밀착한 정책을 실시하여 40대 이후의 장년층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공공기관 신뢰 원천으로서 경남의 청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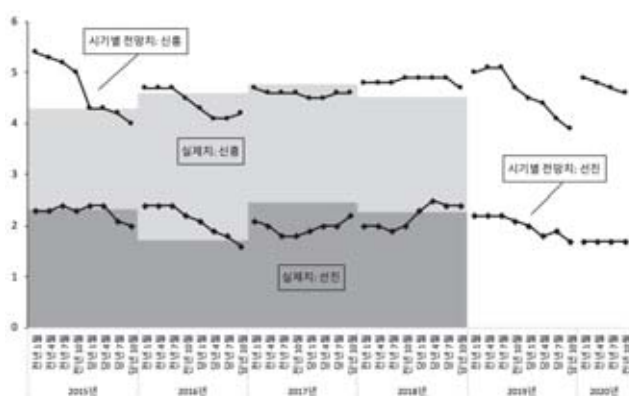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공직자와 정책에 대한 신뢰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볼 수 있음. 국민 권익위원회가 2019년 8월에서 11월에 걸쳐 조사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비교적 건실한 청렴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종합청렴도는 2018년에 비해 1등급 하락하여 3등급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중간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조사와, 전문가와 핵심적인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청렴도 조사에서는 경남만이 유일하게 1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만이 유일하게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종합청렴도(외부 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청렴도)가 중간수준에 머문 것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전체의 60%)임. 향후 일반주민들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경남이 청렴도의 수범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야 할 것임.

■ 경제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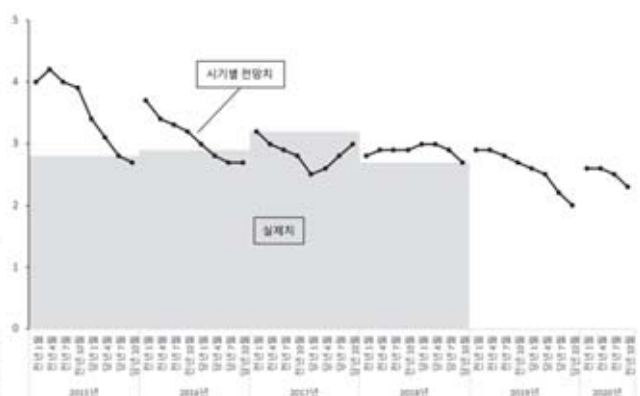
● 전반적인 경기 현황과 전망

- (세계) 글로벌 교역 둔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조업 중심, 신흥국 중심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다소간의 반등이 기대되나 여전히 불확실성 잔존(그림1). 이에 따라 경남과 같이 글로벌 공급체인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경제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음.
- (한국)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경기둔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반도체 경기회복 등 향후 경기상승 요인도 존재하는 상태임. 한국은행에 따르면, 2.0% 성장이 예상되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출의 개선 및 확장적 재정운용 등에 힘입어 2.3% 성장하리라 전망됨.

(그림1) IMF의 세계경제전망 추이: 선진 vs 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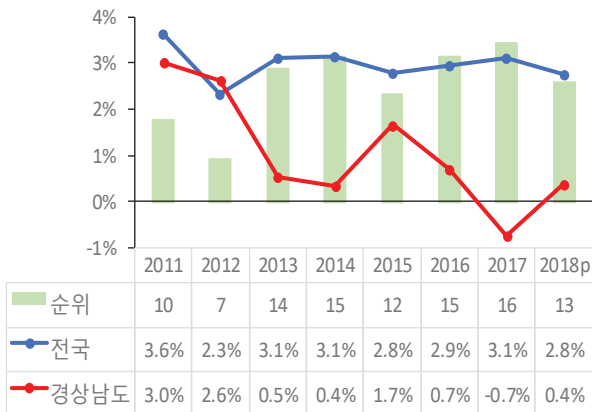


(그림2) 한국은행의 한국경제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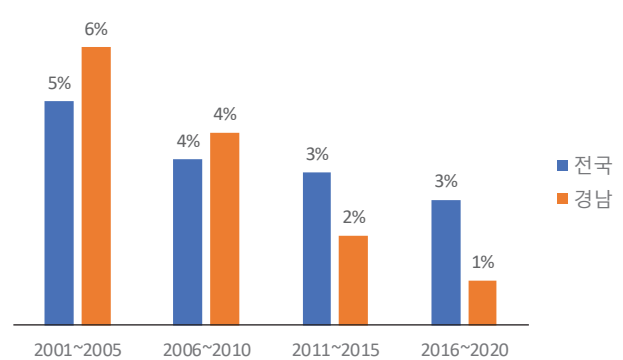


- (경남) 경남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이후 주력업종 침체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지역내총생산(GRDP) 실질성장률이 2017년에 -0.7%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엔 0.4%에 그쳤음.
- 이러한 침체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남 경제 특성상 대체로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2020년에 외부 환경의 개선 여부는 명확치 않은 상황임.

(그림3) 전국(GDP) 및 경남(GRDP) 경제성장률



(그림4) 전국과 경남의 잠재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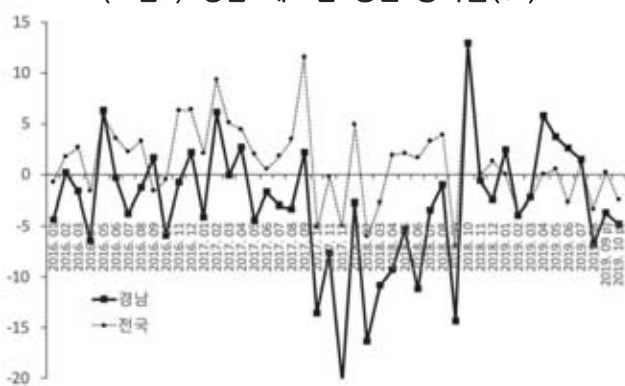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남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2019)

- 한편 부정적인 외부 요인이 경남 경제의 내재적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인적자본 투자 강화, 경제 스마트화 가속 등), 동시에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자생력(resilience)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남 경제를 다소간 재편할 필요성도 제기됨(서비스업 비중 확대, 공공부문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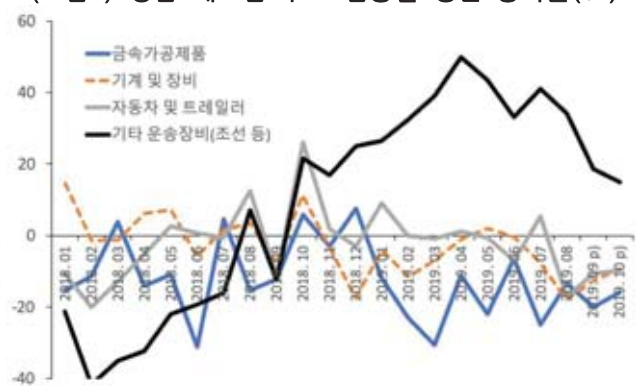
● 경남 경제 현황과 전망: 제조업 생산

- 경남의 제조업 생산은 최근 수년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회복의 기미를 보였으나, 지난해 들어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및 교역 부진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상승세는 주로 특정 업종(조선업)에 의존한 것으로, 다른 주력산업인 금속, 기계·부품, 자동차 생산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그림5) 경남 제조업 생산 증가율(%)



(그림6) 경남 제조업 주요 업종별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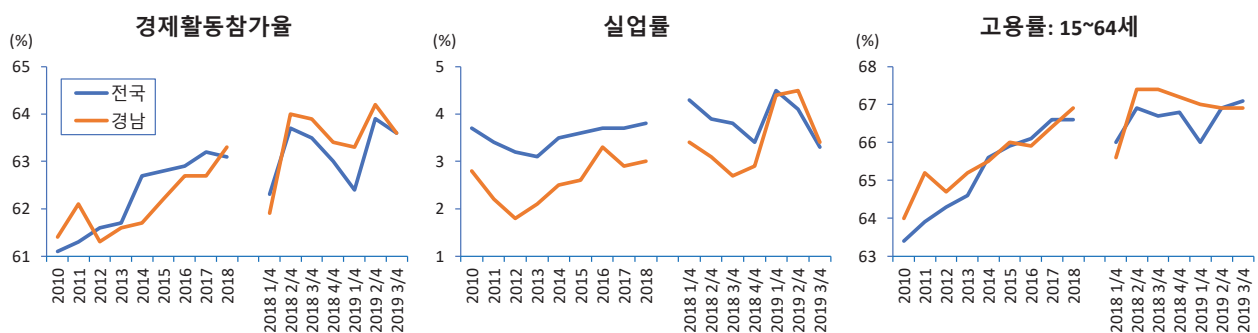


-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은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를 이어가겠으나, 자동차나 기계 같은 경남의 다른 주력업종엔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상태임.
- (조선업) 기대만큼은 아니었으나 지난해 내내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였음. 2020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신규수주, 건조단가, 수출 등 전체적인 시장 상황의 개선이 기대되나 그 폭은 크지 않으리라 예상됨. 2020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소폭 회복, 국제 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하반기에 발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도 전년 대비 약 24% 증가(1,050만CGT 안팎)하리라 기대됨(수출입은행).
- (자동차) 최근 주요국에서 불평등 심화 및 경기둔화의 결과 자동차 수입수요 감소로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이 부진했으며, 향후에도 환경규제 강화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됨.
- (기계산업) 지난해 내내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소폭 개선,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 정부 재정정책 시행으로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 등을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세 예측됨.

● 경남 경제 현황과 전망: 고용

- 2010년대 초반까지 경남은 고용지표가 양호한 편(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이었으나, 최근 들어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거나 실업률이 급격히 치솟는 모습을 보임. 특히 지난해 전국의 고용이 전년도에 견줘 회복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경남은 5월부터 일자리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 여전히 일부 지역(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은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2020.4.4.)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2021.5.28.)으로 지정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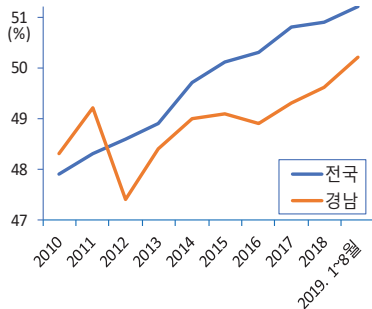
(그림7) 주요 고용지표: 전국 vs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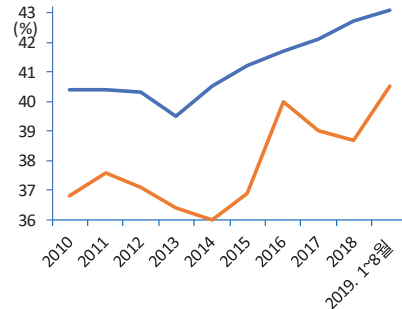
- 경남은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2020년도 고용 성적은 이 부문의 노동력 활용도 제고 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함.
- 최근 실업 증가에 따른 가구소득 보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 정책 등에 힘입어 여성 고용이 늘어나는 중이나, 여전히 전국 평균과 일정한 격차(1.0%포인트 이상) 유지 중이며, 침체에 빠진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로 청년 고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진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일자리 이동이 감지되기는 하나, 이 과정에서 소멸되는 일자리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대체되는 일자리의 질적 저하 또한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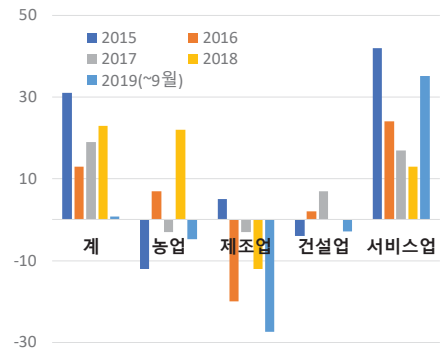
(그림8) 여성 고용률:
전국 vs 경남



(그림9) 청년(15~29세) 고용률:
전국 vs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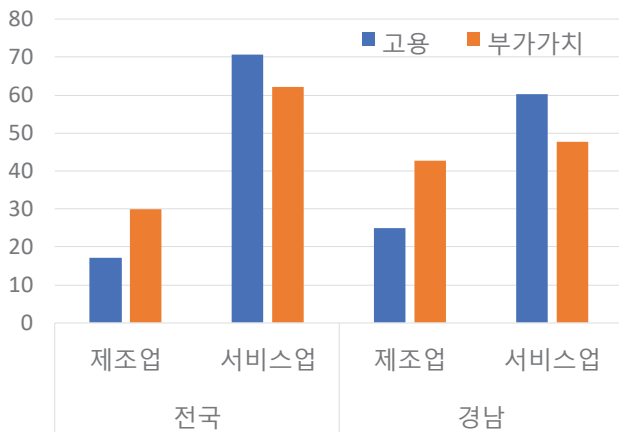
(그림10) 경남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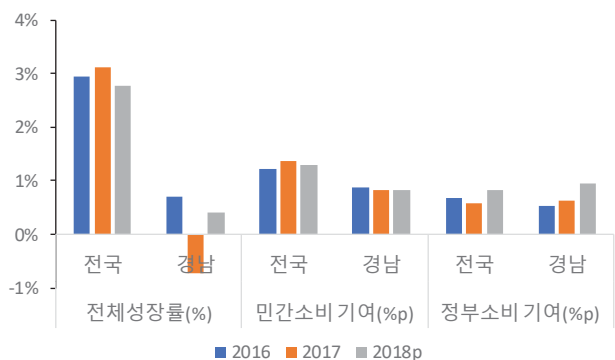
● 몇 가지 정책 제언

- **(지속적 구조개혁과 서비스업 다양화·고부가가치화)** 현재 제조업 부진의 주원인이 대외적 및 세계경제적 불확실성에 있는 만큼, 경남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의 경제 체질 개선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함(‘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기존에 추진하던 제조업 스마트화나 수소경제 심화 등에 덧붙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적 경제생태계 구축,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 체계 마련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전반적인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도 힘써야 함(‘경남 모형’의 확립과 확산).
-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비스업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도의 전반적인 정주 매력도 향상과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임. 여성과 청년 노동력 활용도 제고, 그리고 제조업에서 빠져 나온 신중년을 위한 업종전환 등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재정 및 민간소비의 역할 증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0년은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민간보다는 정부가, 투자·수출보다는 소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리라 예상됨.
- 특히 제조업 생산과 민간부문의 투자(설비 및 건설)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감한 공공지출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자극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수주된 중장기적 시계의 대형 국책사업 중에서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부분들의 조기착공이 바람직함.
- 공공 주도의 SOC 사업 등과 함께, 재정 투입을 통해 도민의 소득을 늘려 지역 내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분배 악화에 유의해야 할 것임.

(그림11)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2017년): 전국 vs 경남



(그림12) 실질경제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기여도: 전국 vs 경남



- (일자리의 이중적 성격) 향후 일자리는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미래수요 대응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현재 제조업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 제조업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 일자리가 늘어나리라 기대할 수는 없음. 경제의 기술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노동력의 적절한 훈련 및 공급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양질의 젊은 인력의 순유출을 되돌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함.
- 현대의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장과 고용은 어느 정도 별개로 접근하여야 하고 ('jobless growth'), 경제적 취약자들의 고용을 늘림으로써 소득이 그들에게 지급되고 또 경제에 환류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고용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사실상 복지정책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특정 집단(여성,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설계해야 하고 사회적 경제와 같은 유형의 일자리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음.

■ 지역주민 동향

● 도지사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지역주민들의 도지사에게 대한 지지와 성원은 도정의 수행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함. 이러한 지지와 성원은 지역주민들의 도지사에게 대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로 대변될 수 있는데, 2018년 7월 2일 김경수 지사가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김경수 지사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경남도민의 긍정과 부정의 평가정도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앞의 정치·행정적 동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김경수 지사가 취임한 첫해인 2018년 9월에서 12월 기간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잘하고 있음'이 49%, '잘못하고 있음'이 22%로 나타나 경남도민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음. 그러나 2019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에는 '잘하고 있음' 39%, '잘못하고 있음' 39%로 나타나 긍정적 평가는 낮아진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높아졌음. 한편 2019년 하반기(6월부터 12월까지)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44%, 부정적인 평가 33%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주민들의 도지사에 대한 지지와 성원없이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고 도민들에 의한 도지사의 직무수행능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와 안정의 리더십을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주요 현안에 대한 경남도민의 인식도 :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도정4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보건, 의료,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경남도민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좋다’가 47.2%로 2017년 48.0%에 비해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 이용만족도는 ‘만족’이 48.0%로 2017의 50.8%에 비해 2.8%로 감소하였음.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는 ‘진료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25.9%)’, ‘치료결과가 미흡하다(18.5%)’,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하다(17.8%)’의 순으로 나타남. 의료비 부담정도의 경우 ‘부담됨’이 31.1%로 2017년 32.5%에 비해 1.4% 감소하였음. 도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은 ‘걷기 또는 달리기 트랙(27.2%)’, ‘수영장(22.2%)’, ‘체력단련기구(20.0%)’의 순서를 보임.
- 가족과 가구, 결혼관,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먼저 도내 가구 가운데 분거가족의 비율은 24.6%로 2017년 23.2%에 비해 1.4%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분거가족 수는 1.4명으로 나타남. 결혼에 대한 견해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0.6%로 2017년 35.4%에 비해 5.2% 증가하였고, ‘하는 것이 좋다’는 49.3%로 2017년 43.9%에 비해 5.4% 증가하여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있음. 저출산의 주된 요인은 ‘자녀 양육의 질적수준 및 부담의 증대(22.6%)’, ‘경제침체 및 직장 불안정(21.3%)’, ‘결혼가치관 변화(19.2%)’의 순으로 나타남. 저출산 해결방안은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의 확충(30.9%)’, ‘자녀 양육부담 경감제도 추진(22.9%)’, ‘자녀양육 관련 직장의 지원(21.0%)’을 들고 있음. 보육시설 만족도는 ‘만족(63.6%)’로 2017년(69.4%)에 비해 5.8% 감소하였으며, ‘보통(28.4%)’, ‘불만족(8.0%)’으로 나타남.
-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2017년에 비해 ‘효과 있다’는 긍정적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 환경 등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201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한편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 및 부담요인의 경우, 초중고 자녀를 가진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에 비해 초중고를 막론하고 10만원이상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81.4%로 나타났음.

- 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를 보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21.4%, ‘불만족’이 30.0%로 나타났으며,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는 ‘나아질 것이다’가 19.9%로 2017년(31.3%)에 비해 11.4%가 감소하였으며, ‘나빠 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29.6%로 2017년에 비해 9.5%가 증가하며 장래가구 소득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의 만족도는 ‘만족’ 17.9%로 2017년(20.9%)에 비해 3.0%에 감소하였으며, ‘보통(55.7%)’, ‘불만족(26.4%)’로 나타남. 가구부채의 경우, 부채가 있다가 42.7%로 2017년(38.8%)에 비해 3.9%가 증가하였으며, 부채의 주된 이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55.4%)’, ‘사업/영농자금(16.6%)’, ‘기타생활비(13.8%)’로 나타남. 노후대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음’이 47.0%로 2017년(49.2%)에 비해 2.2% 감소하였으며, 준비방법은 ‘공적연금(62.2%)’, ‘예금 또는 적금(17.3%)’, ‘사적연금(13.4%)’의 순으로 나타남.
- 주관적 환경체감도(대기, 수질, 토양, 소음 및 진동, 녹지환경)는 ‘좋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대부분 50%미만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대기과 수질은 2017년에 비해 ‘좋다’라는 인식이 감소한 반면에, 토양과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녹지환경에 대해서는 2017년에 비해 ‘좋다’라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오염 방지노력에 대한 반응을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 낭비줄임’, ‘합성세제 사용줄임’, ‘1회용품 사용줄임’에 대해서는 ‘노력한다’는 응답이 ‘노력하지 않는다’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친환경 녹색제품의 구입’,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 참여’는 ‘노력한다’에 비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2019년 하반기 도정과제 이행 점검보고서 작성경과

● 과제이행 점검보고서의 작성체계

- 2018년 8월 16일 도민보고대회를 통해 확정된 도정4개년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기로 함.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18년 11월 15일 30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도정4개년계획의 이행점검과 환류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함
-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과제의 주기적인 점검을 최우선 역할로 삼고, 운영분과, 기획분과, 경제혁신분과, 민생분과, 문화복지분과, 사회혁신분과의 6개 분과를 구성함. 운영분과는 점검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기획분과는 보고서 작성체계와 작성방법 그리고 최종보고서의 발간을, 경제혁신분과를 비롯한 4개의 실무분과는 해당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함. 이러한 점검활동을 위한 자료의 지원과 실무적인 지원은 정책기획관실의 실무진이 맡기로 함.

● 2019년 하반기 점검보고서 작성경과

- 2019년 6월 25일 김경수 도지사 1주년 취임에 즈음하여 도정4개년계획 1주년 점검 및 보고회를 가진 후, 7월 2일 도정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주년 점검보고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점검보고를 위한 활동계획을 논의함.
- 1주년 점검결과 보고회에서 도정4개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가과제 32개를 제안하고 하반기 점검 활동과정에서 이의 반영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2019년 하반기 점검활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2019년 10월 15일 도정자문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 점검보고서 작성의 체계와 작성일정을 논의함. 작성의 체계는 6월말에 이루어진 민선 7기 도정 4개년계획 1주년 점검보고서의 양식에 따르기로 하고 점검의 절차와 작성방식을 재점검하고 점검보고서의 작성일정을 확정함.
- 10월 15일 확정된 작성일정에 따라 정책기획관실은 각 실무부서로부터 과제이행상황을 보고받아 11월말 까지 취합하여 12월 5일 도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함. 12월 5일 정책기획관실로부터 과제이행 추진상황을 전달받고 기획분과에서는 12월 7일 구체적인 과제 점검방식과 기술방법, 그리고 작업일정을 각 분과위원장에게 통보함.
- 과제 이행 점검은 3단계의 작업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운영분과에서 윤독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점검이 이루어짐. 제1단계는 각 분과에서 해당 과제를 위원들에게 배정하여 과제별 점검을 하고 제2단계는 각 분과의 분과장과 간사가 전략별로 다시 정리하여 점검하고 제3단계로 각 분과에서 전략별로 점검된 결과를 기획분과에서 취합하여 검토하는 것임. 12월 7일부터 26일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략별로 점검된 결과를 12월 27일 개최된 운영분과회의에서 윤독하는 과정을 거침.
- 12월 27일 운영분과의 윤독회를 통해 전략별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실무부서와 논의과정을 거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할 도정자문위원회의 최종(안)으로 2020년 1월 10일 확정함. 1월 10일 확정된 내용을 보고서로 완성한 후, 2020년 1월 13일 도지사 및 도의 주요 간부공무원, 도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짐.

제2부

목표 및 전략별 점검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추진상황

- 1. 경제혁신 자원 1조원 및 경제혁신체계 구축 (3개 세부과제)
 - 완료 (1): ②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 조직 개편
 - 실행 (2): ①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③ 산업·지역별 고용실천 전략 수립(일자리사업본부 설치 등)
-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5개 세부과제)
 - 실행 (4): ① 핵심산업 고도화(항공, 조선해양, 나노융합, 로봇 등), ③ 스마트공장 구축
④ 스마트산단 조성 ⑤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
 - 준비 (1): ② ICT융합 개방형 제조운영체제 개발(G-MBP 개발의 변경 과제)
- 3.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7개 세부과제)
 - 완료 (1): ①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 실행 (5): ② R&D 공동연구플랫폼 구축, ③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센터 유치,
④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 ⑤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 플랫폼 구축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치의 변경과제) ⑦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설립
 - 착수 (1): ⑥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1개 세부과제)
 - 착수 (1): ①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 6. 서부경남 혁신클러스터 조성 (5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이천공공기관 연계 특화산업 기업유치 및 산업지원 중추도시 육성(혁신도시 시즌2),
④ 친환경고내구성 세라믹 소재부품을 경남 주력산업으로 육성 ⑤ 지역전략 항노화 산업 육성
 - 착수 (2): ②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③ 희유금속 소재부품클러스터 조성,

과제명 및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경제혁신 자원 1조원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3)			2	1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5)	1		4	
R&D체계 혁신과 광역 연구 플랫폼 구축 (7)		1	5	1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1)			1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1)		1		
서부경남 혁신클러스터 조성 (5)		2	3	

■ 점검의견

● 1. 경제혁신 자원 1조원 및 경제혁신체계 구축

- 경제혁신 국비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지자체 매칭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 발굴 중요
- 신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으로 “경남연구원·경남TP 신규사업 기획전문 조직” 운영에 있어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고려하여 위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제혁신추진위 위상 관련 재원확보 기능은 양호하게 수행, 그러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수행에 한계(2019.11.6일 도지사 면담 시 문제제기),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분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1주년 점검의견) 현장방문, 연구과제 수행과 더불어 ①분과에서 제기된 의제들을 도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 ②유사기능을 하는 타 위원회 등과 협의 등을 통한 정책형성과정이 필요

※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경우 산업혁신, 고용혁신, 노사관계 혁신과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혁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남형 일자리모델,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정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지역리더십 강화가 필요(2019.12.18. 경남 일자리토론의 주요 결론)

●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 ICT융합 개방형 제조운영체제 2020년 신규 공모사업(과기정통부) 준비에 철저, 주력산업과 ICT융합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자체 역량 부족 및 경남 주력산업 구조적 모순과 타 지역 대비 기업의 관심도 저하로 전체적인 혁신 성장 동력은 부족한 상태 ⇒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과제나 분위기 조성 필요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경우 본래 취지와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 점검 필요, 예를 들면 자동화 장비 보급 이외에 궁극적인 스마트공장을 위한 제조 데이터 수집은 사업성과관리 운영지침에도 없는 상황. 따라서 도 차원의 중소기업벤처부에 건의를 통하여 스마트공장공급사업의 본질적인 사업 목적으로 전환 시도 필요. 사전진단 활성화를 통하여 업체별 유형에 따라 수행 사업의 다각화 필요기계 중심 산업에서 ICT융합(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바이오(항노화, 식품, 신약 등), 해양산업 및 관광 분야, 플라잉 개인 수송기기, 양자 컴퓨팅 등의 다양한 아이템 발굴 및 육성 정책 추진 필요 ⇒ 중앙부처 중심이 아닌 경상남도가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 필요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1-2-③,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1-1-2-⑤)의 경우,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실행 조직 및 거버넌스 개편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스마트인력양성의 경우 재직자 교육 관련 예산(도비 4억원)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 이는 미취업자, 대학생 대상 교육사업과 재직자 중심의 도 사업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도 판단. 따라서 스마트핵심인재 양성 컨트롤 타워(장기대책으로 명시)를 시급하게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모색, 양성된 인력의 활용방안 강구

● 3.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의결 6.19, 고시 8.7)) 이후 사업화 진행의 기본 방향 불분명
- R&D공동연구 플랫폼의 경우, 수소경제 관련하여 협의회(워킹그룹 등) 틀을 형성하는 단계라도 판단됨. 향후 초광역권 논의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초광역권 2020년 사업선정 및 타당성 용역),
-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센터 유치 과제의 경우
 - 전자부품연구원(KETI) 동남권본부 유치 후에 확보된 2019년 예산의 지역 기업에 대한 수혜 방안 마련 검토 필요 → 스마트산단추진단에서 추진할 때에는 지역기업과 협업 모델을 발굴했으나, KETI로 추진주체가 바뀐 후에는 지역기업의 참여나 관련 사업에 대한 수혜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중
 - 또한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은 기존처럼 내주화/외주화냐를 고민하기보다 인프라를 제공하고 더 많은 참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
-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상 플랫폼 구축 정도로 진행하지만, 이 사업 역시 진흥원 설립의 전 단계로서 경남TP를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SW산업 진흥을 위한 기존 조직(TP)의 역할(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지역R&D역량 강화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관련하여 제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R&D, 제품개발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R&D 투자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은 센터가 설치된 TP 자체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 절차나 기구가 필요(물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지만)

●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과제의 당초 사업 방향과 경상남도의 의지를 잘 담아낼 필요가 있음
- 제 2신항 건설, 동북아물류 R&D센터 스마트 물류단지, 항만서비스 자유구역 지정 등 세부과제 등은 부산지역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동시에 초광역권 논의 진행에 따라 정책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물류산업 전진기지의 경우, 제2신항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과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항만서비스자유구역 지정의 경우 2020년 상반기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고시(산업부), 용역 완료된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선박 입출항 및 선용품 공급, 서비스 콘텐츠 제공 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도 차원의 준비 상황 점검 필요
-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 미래바다산업 육성, 어촌환경 스마트화를 과제로 신해양산업 창조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와 정책 협조 필요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 경제권 수립과 관련한 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 및 체제 구축이 필요

●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조기 이행 필요
- 고속철도의 안전 운행 및 항공·조선산업 활성화에 따른 물류 이동 증가에 대비하여 김천~진주 간 복선 건설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 조성 필요

● 6. 서부경남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 이전공공기관 연계 특화산업 기업유치, 산업지원 중추도시 육성(혁신도시 시즌2)의 경우 정주여건이나 상생발전 분야 실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특화산업 분야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 인력양성)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등에서는 미흡
- 항공ICT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2019.6)으로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추는데 지역 거점대학의 역할이 미흡 (지역·대학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기획과 연계 필요)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특화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 항공우주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다부처 협력사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 희유금속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희유금속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R&D 연계방안 검토, 광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 광물자원 활용과 경제협력을 위한 워크숍 등을 활성화할 필요
- 친환경 고내구성 세라믹 소재부품을 경남주력산업으로 육성 과제의 경우, 수송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지역전략 항노화산업의 경우, 소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시스템구축, 산업화(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항노화엑스포, 항노화 산업단지, 클러스터, 체험지구 조기 건설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전략1의 6개 과제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 매칭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여력을 감소시키므로 추가적인 국비확보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
- 동시에 20년부터 전개될 국비사업의 구조, 거버넌스 등을 잘 조직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임으로서 경상남도(지역)가 주도하는 제조업 혁신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또 지역 중심 R&D체계혁신(과제3)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을 통하여 지자체-대학-지역 내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구조 구축 필요.
- 동시에 경상남도 차원의 R&D 기획 및 관리 등을 포함한 경상남도 차원의 전담 조직(기관) 설립 관련 R&D계획인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지역-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과 잘 연계하는 것이 중요
- 동북아물류플랫폼(제2신항 등)건설과 KTX광역경제권 구축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초광역 경제권 수립과 관련한 대응체제 구축 논의 및 체제 구축이 필요

● 신규 제안 과제:

- **지역산업 위기대응 TF 신설:** 핵심산업 고도화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발, 이를 위한 기초자료와 분석, 평가,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한 시스템 혹은 전담 조직(지역산업 위기대응 TF팀)을 경남연구원 내에 설치
- **경남 신성장상생기금 조성:** 점검 1주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서부경남 신성장상생기금을 경남신성장상생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 제안 필요, 즉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은 국토부 소관이기는 하나 관련 예산 책정은 없는 상태이므로 혁신도시 개발이익공유제를 활용 가칭 ‘경남 신성장상생기금’ 조성하여 혁신도시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구축 관련 사업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진주시·사천시·고성군·관련 기업 공동펀딩(국가 재정 매칭)으로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지원
 - 경남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가 크게 증가한 진주시의 기금 참여
 - 개별적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관련 펀드의 통합적 관리 운영
 - 제조업과 농업, 항공대기업과 협력업체, 진주시와 사천시, 노인과 청년 상생자금 활용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서부경남)구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상생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추진상황

- 7.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6개 세부과제)
 - 실행 (5): ①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확대 및 채용비리 예방 ②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및 기업맞춤형 일자리 추진 ④ 부산경남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⑤ 경남기반 창업투자회사 설립 ⑥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 착수 (1): ③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
-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5개 세부과제)
 - 실행 (4): ① 경력단절여성 지원 ②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④ 경남창업지원학교 유치 ⑤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 착수 (1): ③ 일자리더하기 장려금 도입
- 9.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7.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6)		1	5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5)		1	4	
9.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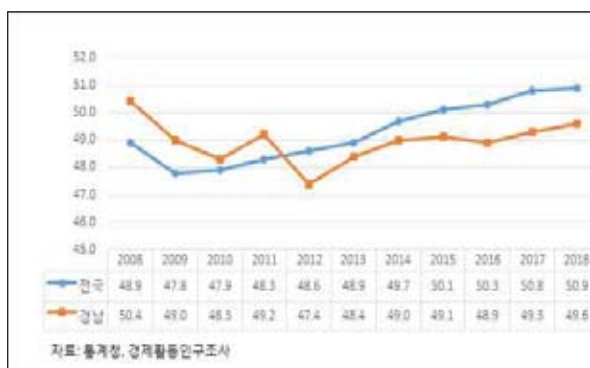
점검의견

- 일부(착수(2) 단계)를 제외하고, 대다수(10) 세부과제는 실행 단계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문제는 이들 과제가 실행 완료되면, 과연 전략 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가 실현될 거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료함
 - 전략의 과제별 성과 점검 및 그 성과가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왜 그런지 그 이유와 기제에 대한 분석과 성찰 요
- 7.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정원 100인 이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년의무고용률 확대(3%~5%)를 추진한 결과 12월말 현재 4개 기관 청년의무고용률(7.3%) 달성. 전년대비 크게 상승.
 - 도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대비 매년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 현황 확인 필요 (100인 미만 포함, 도내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 고용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미이행 기관에 대한 조치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의 주체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해당하므로, 도 산하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청년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있음
- 채용된 청년의 채용형태 및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에 질적인 향상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필요
- 사기업의 경우에도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충족한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고려(고용노동부 상시점검 3년 유예 및 도 지원사업 우선배정 등 여러가지 혜택부여에 대한 고민)
-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은 애로가 많을 것임. 특히 자원 부족한 시군에서 더 많을 것임.
 - ‘지역주도’ 역량 증진은 애로 해소와 시행착오의 경험공유와 학습 등을 통해, 도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함
- 기업맞춤형 일자리 추진: 경남형 트랙사업 활성화 지원
 - 경남형 트랙 사업(2013년 도입)이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성과 증진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요인 분석이 요청됨
- 청소년근로자 노동실태조사: 5백만원의 사업비로 조사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사업비 증액이 요청됨
-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
 -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향상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확대 실시 필요
 - 체당금신청 및 체불임금 소송 무료지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노무사협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제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 있음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장 선정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함

●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9년 3/4분기 경남여성의 고용률(50.8%)은 전국 여성의 그것(52.2%)을 밑돌아(<그림 1>), 경남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그림1> 여자 고용률: 전국 및 경남



<그림2> 기혼 여성(15~54) 중 경단녀 비중: 전국 및 경남

- 종래 경남의 여성고용대책은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아예 경력없는 여성에 대한 대책은 미약함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그림 2>), 경남에서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경력 있는 여성)의 비중은 2019년 상반기 현재 16.6%로 전국 평균(19.2%)을 -2.6%p 하회함. 이는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대책의 효과를 반영한다 할 수 있음.
- 경력단절이 중요한 여성문제이나, 아예 경력이 없는 여성이 경단녀(경력 있는 여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경남에서 비취업 기혼여성 중 경력 없는 여성 비중(55.3%)이 전국 평균(49.5%)보다 훨씬 더 높고 최근 보다 더 악화된 사정에 주목 요
- 예비창업여성 대상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사업비 규모가 연 5천만원에 불과하여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은 주로 대출자금 마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대출을 갚아야 하는 반면 창업에 실패한 사람은 대출금을 면제 해주고 있어 오히려 창업에 실패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소지 있음. 창업에 성공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 있음.
 - 경력단절 여성들이 주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지원이 필요함.
 - 청년지원 사업예산 대비 여성지원 사업예산 대폭 증대할 필요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이수율을 점검할 필요 있음,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프로그램 이수기간이 보통 3개월정도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및 육아 등으로 인해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수당 지급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여성지원 일자리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예산 지원이 많지 않음,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워킹맘들을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아이들 방학기간 중 점심해결 지원정책 등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 2019년 사업 성과 분석후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중장기 전략 수립의 방법 불명. 당해연도 사업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신중년층에 대한 기초연구 및 다른 지역의 운영 경험 비교 등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인 기본계획 작성 요
- 일자리더하기 장려금:
 - (고용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기업에 대해 도가 고용부 지원금의 50%를 1년 연장 추가 지원하는 사업). 고용부의 지원 기업 현황 자료 공유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추진애로사항(문제점) 해결 대책 마련 위해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적극적 대응 요.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지역주도 일자리 거버넌스

-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협력이 필수적임. 이를 증진하기 위한 경남도 일자리 거버넌스의 보완 노력 요
- 시군과 함께, 상향식 협력 조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주요 주체들의 협력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추진상황

-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8개 세부과제)
 - 실행 (8): ① 제로페이 도입, ② 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 ③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④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⑦ 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 지원, ⑧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확립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확립, ②장기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금융복지제도 확충
- 12. 중소기업 고용 투자 환경 개선 (3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중소기업 시설 설비 투자 및 경영안정자금 확대, ②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③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2개 세부과제)
 - 완료 (1): ①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 실행 (1): ②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8)			8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확립 (2)			2	
12. 중소기업 고용 투자 환경 개선 (3)			3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2)			1	1

점검의견

-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 제로페이 도입
 - 과제이행율 산출 기초를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보다는 가맹점 가맹율로 변경해 제로페이의 확산 정도 측정을 권고함
 -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 추이 및 결제 금액 및 결제 건수 등을 초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되 인천의 이음카드 등 타 광역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전략 수립 요
 - 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
 - 경남사랑상품권의 판매 현황을 분석하여 지류 상품권 발행 검토 및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 분석 필요

- 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 지원
 - 사업 추진시 설명회, 공청회 등은 물론 소상공인의 의견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요망
 - 경남창원도매물류센터 등 경남내 도매물류센터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후 실제 중소유통업체에게 도움이 되도록 김해유통물류센터 건립 요
 - 경남도내 중소물류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필요

●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확립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2019년 7월 개소 이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28건을 진행하여 상담을 종료하였음. 향후 상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강화 필요함.

● 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및 경남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홍보가 더 필요. 사업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음

● 13.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경남형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일자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환경(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일자리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사업방향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전 교육 등) 재편 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의 통합지원기관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조직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사업 운영이 필요함(민간위탁 사업제안서 등 검토 필요)
- 중앙정부 중간지원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필요
- 2020년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 추진단'의 구성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단 구성 전까지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과제 이행률을 예산대비 집행액으로 산출하기보다 사업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치에 대한 성과로 산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예산은 집행되었으나 실제 성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음)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의 경우, 과제 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과 과제들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과제(과제 10~12)관련, 기존 중소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며,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 진행 상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제 12 중 청년 채용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사업들은 경상남도의 청년관련 부서(청년 정책추진단) 및 관련 사업들과 연계를 통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제안 과제

-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 지원:** 농수산물 등의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직접 전통시장 및 골목수퍼에 공급하는 사업(경남도의 일부 지원)을 전개하면 산지의 사회적경제 기업 등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음.

(특정상품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소포장, 소분작업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각 전통 시장 및 골목수퍼에 직접 납품하는 사업)

- **소상공인·창업자를 위한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규과제 제안 배경)

-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활용도 높은 양질의 상권 정보, 유통, 소비 데이터를 생산·구축하는 센터 및 이를 수집·분석·유통하는 플랫폼 필요
- 경남도의 낙후된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 수행
- 경남도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창업 정보 제공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 도민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과제목표)

- 2021년까지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은 상권 정보, 유통, 소비 등의 융합데이터 기반 창업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폐업을 10% 감소
-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은 향후 상권 정보, 유통, 소비 등의 융합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업, 농축수산업, 공공행정, 창업,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계 구축 가능
- 특히 AI,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임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추진상황

-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 15.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경남 농산물수급안정 및 최저가격보장, ② 경남 공익형 직불제 추진
-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청년 취농인턴제, 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② 경남형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 17.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농정 실현(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
- 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스마트양식장 조성 및 어촌 6차 산업화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1)			1	
15.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2)			2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2)			2	
17.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농정 실현 (1)			1	
18. 스마트양식장 조성 및 어촌 6차 산업화 (1)			1	

점검의견

-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성 강화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시군별 수요와 여건 분석, 경남 급식 전반(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대한 분석 자료, 경남 내 친환경 생산자 조직의 현황과 과제 등을 근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푸드플랜 실행계획 마련 필요
 - 세부과제 실행을 위한 담당부서의 역할 확대 필요(기획 및 실행 구분), 먹거리위원회 운영 혁신을 통한 기능과 역할 재조정 필요(회의 중심이 아니라 실천과 성과 중심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
 - 부울경 광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과정에 민간의 참여 보장이 거의 없음,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트워크 구성과 지속적인 포럼 등의 운영으로 부울경 도민, 시민들의 인식 제고 필요

● 15.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 농산물 수급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가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제도정착을 위해 정확한 통계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품목 주체별 의사결정권 강화, 인센티브 마련 등이 필요
- 경상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론화와 수급안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전반에 대한 생산자 공청회 등 개최 필요
- 공익형 직불제 실천 마을의 선정 과정에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의 소액지원사업과 차별성 부족, 중복성에 대한 현장 문제 제기에 대한 시군 담당자, 시행 마을 대표자 공동 평가회 개최 필요(경남형 공익형직불제의 참신성과 성과 퇴색 우려)

●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 스마트팜은 투자규모에 비례하여 토지 및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농장의 규모화도 함께 진행되고, 계절노동 중심에서 상시고용으로 농업 고용 구조 변화를 촉진할 것임
- 향후 줄어드는 농가인구와 고령화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스마트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기존 시설농가와 갈등을 초래하는 요소임. 스마트팜으로 대표되는 시설농업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농업 전체의 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출을 포함한 시장접근 전략수립과 세심한 속도 조절이 필요함. 현재의 시설농업 중심의 스마트팜 추진전략은 스마트농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농촌에 필요한 청년농업인 등 인적역량을 확보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업생산자 그룹은 소규모 생계농, 중규모 상업농, 기업형 상업농 생산자로 분화가 가속화 될 것임. 이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업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를 넘어서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17.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농정 실현

-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와 주무부서, 도의회 농해수위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조속한 조례 제정 및 농특위의 기능과 위상 제고 필요, 의제발굴과 실행 중심의 기능 전환을 위한 사무국 기능의 민관 협력형 농정기획단 역할 강화가 필요

● 18 . 스마트 피쉬 팜 보급 확대 정책관련

- 해상가두리 스마트 피쉬 팜 공모 선정 관련하여 경남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선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해상 스마트 피쉬 팜은 친환경 양식어업과 기본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상가두리 스마트 피쉬 팜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어떤 품종을 어떤 방법으로 스마트 피쉬 팜을 조성할 것인지 실용모델 제시할 필요 있음.
- 30억원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스마트 피쉬 팜 10개소 조성이 가능한지 재검토 필요.

● 19. 패류 양식산업 육성 관련

- 패류 양식산업 육성 영역에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인공종자 생산장 확충 및 고도화, 첨단수산물 가공공장 조성, 수산물 생산 위생시설의 설비 확대, 패류특화 품종 육성 및 R&D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첨단수산물 가공공장 조성지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통영의 대표적인 패류인 굴, 홍합(담치), 피조개, 가리비, 바지락에 더하여 패류는 아니지만 멍게를 포함해도 대표 수산물 6개에 지나지 않는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첨단수산물 가공공장을 조성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패류를 대상으로 가공공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영역과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 있음.
- 패류양식 연구센터를 운용할 조직, 기구 구성을 마련하고 신규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있음.

● 20. 어촌 6차산업화 지원 사업 관련

- 어촌 6차산업화 지원 사업은 신규마을 발굴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촌 6차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생산, 가공, 유통의 산업적 배경과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규마을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2019년은 계획과 실행 초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2020년은 농정 및 먹거리 분야의 혁신사례, 민관협력형 모범사례 등의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시기임. 도민들의 인식에도 농정의 틀 전환이라는 국정 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남형 공익형직불제, 푸드플랜, 협치농정의 가시적 성과를 내어야 하는 강력한 조직과 실행의 추진체계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다소 부족함이 역력함.
- 농정거버넌스인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농업의 생산주체가 가시적 성과에 기대감을, 소비주체인 도민이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점차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요구됨.
- 경남도의 수산물 생산은 전라남도과 더불어 타 시.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 중심의 편중된 정책지원 사업을 해양수산 분야로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필요 있음.

- 특히 수산업과 농업의 세제 혜택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 경상남도가 앞장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현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신규 제안 과제

- 도지사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와 부지사 직속 먹거리위원회의 총괄적 거버넌스 운영과 **농정추진체계 일원화를 위한 TF팀 운영**
 - 점검과 실행, 경남형 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제시와 운영(농정국 / 사회혁신추진단 / 농어업특별위원회 / 먹거리위원회 / 경남연구원 협력형 사례)
 - 시군별로 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맞는 지역농정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며 농어업 회의소에 대한 자생적 준비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지원.
 - 협치농정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지역리더 발굴과 혁신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필요(경남형공익형직불제 점검체계 운영)
- **농촌활동가 육성 및 발굴을 통한 경남형 농촌일자리 발굴**
 - 청년농업인정착지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과 차별되는 농촌활동가형 일자리 발굴과 지원 제도 강구 필요
 - 농촌에 집중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영역에 역할과 활동이 요구되는 상시활동가 발굴은 절실하지만 일자리와 인력의 연결이 쉽지 않음
 -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주기반 지원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협업이 필요
 - 도시와 농촌, 은퇴 노동자와 농촌을 잇는 인생2모작 프로젝트 등 연계(노동조합과 농민 단체 간 협력사업)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추진상황

-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② 평생교육·사회교육
-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3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② 청년 터 조성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복지 확대
-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7개 세부과제)
 - 완료 (1) : ⑦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 실행 (4) : ①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설치 ④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⑤ 보육료 차액지원 ⑥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및 긴급육아공공가사도우미 파견
 - 착수 (1) : ② 경남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 준비 (1) : ③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22. 지역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증진(8개 세부과제)
 - 실행 (6): ②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④ 경남형 치매 관리 책임제 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⑥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⑦ 찾아가는 검진버스 농어촌 순회 무료검진 ⑧ 경남 365 안심병동 확대
 - 착수(2): ①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③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2)			2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3)			3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7)	1	1	4	1
22. 지역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증진 (8)		2	6	

■ 점검의견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무상급식
 -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 식품비 단가 인상을 통한 급식 품질 개선
 - 무상급식 비용 경남도 30%, 교육청 30%, 시·군 40% 분담
 -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무상교육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무상교육 고교까지 확대
 - 수학여행비, 체육복 등 교육청 자체 실시
 - 비용이 많이 드는 교복의 경우 지자체 지원으로 2021년부터 전면 시행
-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 청년정책
 - 청년정책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는 것과 도 차원의 정책 개발과 발굴 강화가 필요함.
 -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에서 도 중심으로 하면서 향후 시군과 함께 노력
 - 청년 터
 - 사업 공모를 할 때 시군의 청년 인구, 기반 시설, 청년 거버넌스 운영 등에 가점 배려
 -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 가능 여부를 경남연구원에 연구하는 방법
-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위원회 및 분과 설치, 인구정책 도민 자문단 구성, 경남인구 맵 용역 완료 등 `19년은 경남 인구정책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20년은 실제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 경남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에 기초지자체가 부지 확보 및 사업비 소요 문제로 적극 추진을 하지 않으므로 경남도가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시·군은 예산지원 부담 및 저출산에 따른 이용률 감소에 대한 부담감으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설치가 확정된 밀양시에 설치·운영 후 타당성 검사를 통하여 권역별 확대 설치는 타당하다고 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예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병행 개선으로 일반 부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쏠림 현상 방지 필요
 - `20년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요망

-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은 '19년 목표치를 초과하여 조성되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확대 설치하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설치 시 지역 영유아 부모의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기초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임. '20년 공공가사도우미 지원 예산 확보와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20년 긴급 육아 도우미 및 공공가사 도우미 양성 과정을 지원하여 서비스 질 확보 필요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완료되었지만 차후 필터 교환 등의 관리 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 **진주권 공공보건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의 합리적 설계 및 진행 필요**
 - 진주권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관련된 공론화 의제 속에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혁신추진단과 보건의료노조·도민운동본부 간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는 추가 비용 및 다양한 영역의 공익적 적자가 발생**
 - 경상남도 자체 대안 및 부산광역시와의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 있음.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추세임 / 교복지원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 교육청과의 갈등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강화 성과
 - 국가와 지역,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자원 배분 문제가 지역 환경에 따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청년터 조성사업을 생활SOC 시설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청년복합센터가 사회혁신 허브 역할과 기능하도록 유도.
 - 청년터(북카페, 회의실, 상담실, 문화공간 등)의 모델을 발굴하여 시군과 유치
 -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는 우선 설치한 기관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민간 영역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방안 마련이 필요함. 경남 인구 맵을 통한 인구정책 수립 계획을 조속히 세워 경남 청년층의 인구 유출 대처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한 문제임.
 -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앞서 현황조사를 통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의 전환 검토
 -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은 농촌지역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농촌의 경우 마을회관 활용과 마을 주민의 육아 돌봄 일자리 창출 방안 및 도시의 경우 공기관의 유휴 공간 공동 육아나눔터조성 방안 검토

- 주변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설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개선을 통한 상생방안 마련
- 보육료 전면지원을 위하여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대상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하는 곳이 있는지 보육료 실태조사
- 가사도우미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가사도우미 사회적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방안 마련(참조: 가사도우미 사회적 기업 '우렁각시')
- (지역 공공의료보건의료 서비스 증진)대부분의 영역에서 계획대로 추진 중.
- 현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는 진주권을 공공병원 신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을 전제한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필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시 부산광역시의 어린이 재활 환자들의 이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산광역시와의 재정분담 협조체계 구축은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
- 시군, 읍면동 단위의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및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사업의 체계적 연계
 - 시군, 읍면동 단위의 보건의료인프라 확충사업의 기대효과는 건강정책에서의 주민참여 기전 체계적 구축, 보건과 복지 서비스 연계, 풀뿌리 단위에서의 주민건강관리인프라 강화임.
 - 이는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시군 및 읍면동 단위의 수평적 연계체계로서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현재는 불균등적이고 분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자치행정국 행정과,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복지정책과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의 맥락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해야 함.
 - 동시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영역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 신규 제안 과제

- 보건지표의 질 개선 및 자체 근거기반 확충을 위한 '경남 보건의료패널 조사' 실시
 - 경상남도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지표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필요
 -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조사 전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나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지표를 생산하여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검토 필요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특화된 근거기반 확보 필요
 - 현 단계에서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남 보건의료패널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전략 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추진상황

- 23. 노동자 권익 보호 (8개 세부과제)
 - 완료 (1): ① 노동전담부서 설치 및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 실행 (5): ②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⑥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⑦ 생활임금 ⑧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착수 (1): ④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
 - 준비 (1): ③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② 젠더폭력방지 기반 구축(#With you 경남)
- 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②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
-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4개 세부과제)
 - 완료 (1): ④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 실행 (3): ①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② 어르신센터 설치 ③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찾아가는 복지센터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23. 노동자 권익 보호 (8)	1	1	5	1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2)			2	
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2)			2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4)			3	1

점검의견

-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확대 노력 소중, 내실 확대 요.
 - 경남노사민정협에 대한 민주노총의 참여 보류 등 추진 애로사항 관련해,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등을 고려하면 경남 지역 고용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민주노총의 실질적 협력 확대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 요
 - 지역노사민정협,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노동정책 관련 업무의 민간 위탁이 경충에 집중되고 있어 그 추진 방식에 균형감 요
 -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 취약노동자 지원의 착실한 추진 인정됨
 -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주제로 한 노사민정협의의 실질적 협의와 협력 증진 요

- 생활임금 및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적용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여타 민간부문으로 점진적 파급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확산 노력 요
-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가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현재의 여성 특보는 실제로 여성노동 특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업무가 과다하여 젠더정책에 집중하기 어려움이 있고 여성가족재단 설립에 있어 타시도와 비교하면 예산과 규모가 너무 작음. 중장기적으로 여성재단 기능을 확대하여 여성플라자로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각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7% 달성을 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회의 구성에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는 미치지 못함,
 -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해 `19년 교육 예산이 2배로 확대되어 실시됨. 교육 효과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남성과 소년 대상의 양성평등교육 강화가 요구됨
 - 18개 시군에 With you 지킴이단은 구성되었으나 이들이 실제로 지킴이단 활동을 위해서는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들 대상의 젠더폭력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요구됨
-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초단계에 불과함. 조례 제정으로 끝나지 말고 조례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 연구용역 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실태, 현장의 욕구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용역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으므로 명백하고 필요한 정책은 개발해야 함.
 - 조례제정 및 용역 그 자체를 목표가 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
 - 장애인일자리 확대 : 우리사회 가장 취약한 직업재활시설 등 보호고용 장애인 약 1,200명의 최저임금 개선, 근로시간 확대, 생산여건 개선 등 정책지원 필요
 - 우선구매 활성화 : 우선구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보호 고용된 중증장애인일자리 및 소득과 직결되므로 인권차원에서 우선구매를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기반 강화정책 필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의 핵심 축은 생산과 판매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 필요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군지역) 비용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시지역 확대가 필요함.
 - 어르신센터 설치사업은 센터의 기능과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 새로운 복지행정체계 구축

-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직공무원의 충원이 (정원 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함.
-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이 필요함.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불과 1년이란 단기간에 취약 노동자 지원 과제 추진이 상당히 크게 진전됨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은 대체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음.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경남이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인구, 복지 등 모든 정책 부서에 젠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실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실국장들의 젠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와 실현 의지가 요구됨
- '20년 개편되는 여성가족청년국의 수장엔 젠더 정책 관련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 차후 개방형 공모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함(사례: 대전시-기획조정실 내 젠더정책담당관 공모 채용, 부산시-여성가족국장 개방형 공모 채용)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을 위하여 도내 성평등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킹으로 교육전문성 강화
- 제정된 조례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 인식개선, 인권침해 구제지원 등 경남형 장애인 인권 정책 개발 및 시행 제안
- 용역 중이라도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필요성이 명확한 장애인 권익옹호 정책 개발 제안
- 다양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개발, 품질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정책 제안
-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판매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마케팅 기반 강화 제안
- 전체적으로 26. 과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과제명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지원 및 새로운 복지행정체계 구축'으로 변경하여, 과제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어르신센터의 확대 설치에 '어르신센터 운영모형연구'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위탁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행과제 ③ 찾아가는 복지센터, ④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는 복지행정체계 개혁에 관한 과제로 연계 추진이 바람직함.
-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은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규 제안 과제

-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실현으로 사업수혜자에서 차별을 겪거나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에 젠더정책 담당관제 실시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추진상황

-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3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운영, ② 도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질 관리 ③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28. 낙동강 수질개선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낙동강 수질개선
-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② 수소사회 실현 기반 구축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3)			3	
28. 낙동강 수질개선 (1)			1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2)			2	

점검의견

- 대기측정망 확충 및 대기질 관리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에만 치중하기보다 대기오염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평가단 운영(연 1회는 문제가 있음) 등 실질적인 예·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각 지자체에 미세먼지 조례 확대를 행정지도하며, 향후, 시행될 대기오염총량제에 대비한 면오염원과 선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사업 등이 필요함.
- 친환경차 보급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친환경차 보급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과 유관부서 협조를 통해 친환경차 인프라 조기구축이 필요한 사업임.
- 낙동강 수질개선
 - 난분해성 물질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4단계)에 실시 예정인 TOC 도입계획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및 수소사회 실현 기반 구축
 -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므로 남동발전 등과 협의하여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전담부서(에너지산업과) 신설에 따라 에너지 전환사회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분장의 재정비 필요.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최적의 대기질관리와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과제는 경남도 차원만으로 해결되는 과제가 아니라 다른 시·도와 광역권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과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그동안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들을 추진해오고 있음.
-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과 수소사회 실현 구축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4차산업혁명과도 연계된 과제로서 도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함.

● 신규 제안 과제

- 대기오염총량제에 대비한 면오염원과 선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사업 등이 필요함.
- 난분해성 물질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4단계)에 실시 예정인 TOC 도입계획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이 필요함.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

추진상황

-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획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7개 세부과제)
 - 완료 (1) : ⑥ 예술인복지센터 설립 및 예술인복지조례 제정
 - 실행 (7) : 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구성 및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능 정상화
② 경남도립예술단 창단 ③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지원 ④ 경남정신
확립 ⑤ 경남예술인 그라민금고 설치 ⑦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및 지원조례 제정
- 31. 생활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4개 세부과제)
 - 완료 (1) : ① 창원마산야구장 조기 건립 지원
 - 실행 (3) : ②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③ 장애인체육관 건립 및 이동약자 체육
편의시설 확충 ④ 생활체육 활성화
-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2개 세부과제)
 - 실행 (2) : ① 힐링 휴양관광 상품 개발 및 남해안 도보여행길 조성 ② 열린관광
1번가조성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획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7)			6	1
31. 생활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4)			3	1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2)			2	

점검의견

-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획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능 정상화에서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기관분리를 위한 보다
구체적 로드맵 작성 요구(문화와 콘텐츠는 기관 성격 상이로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후 분리)
 - 경남도립극단 운영시 기존 경남내 민간극단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고 전반적인
경남 연극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비상임단원 적극 활용) 요망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재추진시 국제비교연구 학술용역 추진, 학술지
논문건수 확대 지원. 가야사 연구자 부족으로 대학원 가야전공자 지원 확대 요망

- 경남 선비문화자원 수집 및 보존기반 구축사업 국비확보 애로에 따른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 설립시, 기존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의 관계정립 필요
- '19년 경남학 연구사업은 기획연구와 일반연구를 구분하여 선비문화뿐만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남해의 풍속 등 지역별, 분야별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20년 예산이 5천만원으로 절반이 삭감됨에 따라 연구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음.
- 생활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조성
 -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에 시군 참여 저조에 따른 홍보방안 강구가 6월 점검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이후 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 홍보추진이 요구됨.
 - 6월 점검보고서에서 신규과제로 제안한 스포츠산업(스포츠 전지훈련 지원센터 등)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호함.
-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 힐링 휴양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한방향노화산업과, 경남향노화주식회사와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요망
 - 남해안 도보여행길은 경남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지속적 홍보방안 수립 요망
 - 경남관광진흥재단 설립 전 관계기관인 경남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경남관광협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논의 필요. 설립시 구체적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요망
 - 관광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서 관광협동조합 발굴지원이 매년 1개소로 저조함. 마을단위 관광활성화가 최근 전반적인 추세이고, 향후 지역관광경쟁력의 주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 개소수 증대 요망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전반적으로 과제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다만,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이 문화, 체육, 관광 등 분야를 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추진주체간에 협력과 연계가 기반되지 않으면 자생력있는 문화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해야 할 것임. 더불어 각 과제의 최종 목표가 단순한 과제 달성보다는 그 목표달성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의 확대에 더욱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 신규 제안 과제

- **가야사 교육과정 도입:** 가야사 관련 도민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가야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초등, 중등 교과과정에 ‘가야사 교육과정 도입(가야사 관련 광역지자체: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등)’ 제안
- **18시간 공공체육시설 운영:** 18시간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7시간 시범운영 후 판단하거나 수요조사라도 실시하기를 요청함
- **동남권(부울경), 남해안권(전경부) 지역학 공동 연구:** 경남의 외국인관광객 증진을 위해서는 동남권, 남해안권 등 초광역관광벨트 추진이 중요하며, 초광역관광벨트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부산·울산·경남, 전남·경남·부산의 지역학 연구를 통한 원형자원 발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남권(부울경), 남해안권(전경부) 지역학 공동 연구’ 제안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조성

추진상황

-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도시재생 활성화
- 34. 유니버설 디자인도시 구현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② 저상버스 보급 확대
- 35. 수요자중심 광역교통체계 확충 (3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광역교통체계 확충 ② 브라보 100원 택시 ③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 개통
- 36.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4개 세부과제)
 - 실행 (4): ①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및 안전감시단 도입 ②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강화 ③ 화재방재 대비시스템 강화 ④ 학교건물 내진보강 및 스프링클러 설치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1)			1	
34.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2)			2	
35. 수요자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3)			3	
36. 자연 및 사회재난 예방·대응 체계 강화 (4)			4	

점검의견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 공공건축가 제도와 도시재생 사업 협력 현황 별도 점검 필요,
 - 경남도 도시재생센터 : 1억원 예산 삭감, 경남형 재생사업 좌초 위기.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중간지원(활동가) 인력양성사업' 예산 삭감. 추경에서 복원 필요.
 - 공공문화시설 공사비의 5~10%를 향후 5-10년간 공공건축 운영 문화프로그램에 할애하는 '공공문화시설 프로그램개발경비 할당제' 검토 요
 - 공공건축 담장허물기 및 로비 및 외부와 옥상공간 시민개방 요 - 현재 교육청 공간만 추진 중. 경남도 공공기관도 시범사업 필요(경남연구원에서 공공건축 공개공간에 관한 실태조사 수행(2019. 10, 도청건너편 공공건축 밀집지)
 - 공공건축 주차장 공동관리(일례로 가야연구소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경남연구원은 부족) 필요
 - 도시재생의 하드웨어 평가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량경관 양호경관 감시 사이트' 개설 요
 -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2억 지원 확정(18년 제주 예산의 1/2수준). 졸속 진행 우려.

- 수요자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 부울경 협의체 필요, 국토교통부 예산 지원 필요, 노력 지속 요
 - 지자체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박차 요(환승할인 김해-창원(19하반기 시행), 진주-사천 추진 중, 통영-거제, 마산-함안을 추가 검토) / 기존의 김해-부산, 부산-양산은 확충 / 거제-부산간 광역교통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정책 수행 요, 노력 지속 요
 - 각 지자체의 버스 준공영제 실현에 대한 도의 협조 필요 - 선 광역간 노선 조정 필요
-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 단순 CCTV설치를 넘어 창조적이고 다양한 예방기법 제안을 요구했으나 대응 미흡 (ex) 골목 교차로바닥 빔 투사 넘는 더 적극적 재미있는 동네 아이템 개발 등) - 부서간 협조구축 요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하드웨어 지양 소프트웨어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편리함, 안전함을 담보하며 무난 진행 중
 - 고속화철도연계 교통체계와 지자체간 광역교통망, 전라남도 연계고속철 청사진과 전담부서 요
 - 총체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조성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남부 건축·디자인센터 구축 절실
- 신규 제안 과제
 - 국립 남부 건축·디자인센터 구축 계속 노력 요. 공공건축가 제도로 보완은 인력임. 선진국처럼 건축모형, 구조물, 아카이브 등을 전시하고 보관할 공간 필요.
 - 남해안 고속철 전담팀 필요 : 부전-진주간 준고속화 철도를 전라남도과 연계 남해안 ‘고속철’ 대비 관광객과 방문객 시너지효과 등 거시적 계획 필요
 -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 품질검수단 서비스 필요(전수조사 불요, 현재 30년 이상 주택만 시행중), 도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행(예산 절감 가능, 상반기 점검사항 반영 미흡)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추진상황

-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공약, 1개 세부과제)
 - 준비(1): ①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투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조례 개정)
-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3개 세부과제)
 - 실행(2): ① 주민참여예산제(공약), ② 도민참여 활성화 협치(도정배심원제, 도정자문위원회, 읍면동장 도민 공모제 시범시행, 국민소송제 도입)
 - 착수(1): ③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도민 감사참여 활성화
-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3개 세부과제)
 - 실행(2): ① 뉴미디어 도민 참여 확대, ③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 준비(1): ② 도민과 함께 서부청사 행복화원 조성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1)	1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3)		1	2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3)	1		2	

점검의견

-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지연으로 경남 주민투표조례, 경남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조례 개정이 어려운 상황
 - 관계 법령의 개정 시 신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최대한 청구요건 등을 완화하고, 도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가능토록 조례 개정(안) 준비 필요
-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에서 시행한 것을 경험으로 시군에서도 시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필요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예산을 배정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좀더 깊이 있고 긴밀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고성군 고성읍에서 실시한 고성읍장 공모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읍면동으로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타 시도 감사위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세밀하게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9. 도민정책 참여 플랫폼 마련

- 유튜브, SNS 등 뉴 플랫폼에 의한 PR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속에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젊은 세대들의 도정에 대한 니즈(needs),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의 효능 제시할 필요 있음.
- 서부청사에 도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나 2019년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음.
- 품질검수단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좋으므로 담당 인력 확대와 전담 인력 보강을 위해 정책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또한 이런 내용을 전체 모인 장소에서 발표, 토론하면서 SNS로 방송하는 시도 필요함.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도민들의 직접참여는 현재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참여 장려가 필요함.
-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읍장 공모가 잘 뿌리 내리도록 협력해야 하며 한편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도를 적극 협력, 지원해야 함.
- 도민들의 쌍방향 뉴미디어 활용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타시도의 사례를 적극 참조할 필요 있음.

● 신규 제안 과제

- **대의민주주의 보완 및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 법의 범위 안에서 직접민주주의 실현할 제도, 예를 들면 ‘경상남도 주민참여조례’(가칭), 주민참여정책제, 민주시민교육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사회,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 강화할 필요 있음.
 - 전문성 요구되는 공무원직에 있어서 도민 추천 개방형 임용제 확대 필요
 - 도민 참여와 주도로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할 필요 있음.
-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 방통위 미디어센터(후보자: 창원시) 연계 ‘경남 정책 시청자 수용프로그램’ 지원 및 ‘완전히 새로운 경남’ 미디어 확산 센터 조성
 - 서부청사 행복화원의 경우, 서부경남의 상징적 정원 혹은 남명학을 연계한 개념 정원 검토(2020년 추경예산 확보 필요함)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추진상황

-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1개 세부과제)
 - 실행(1): ①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 41. 통합행정체제 구축(2개 세부과제)
 - 실행(2): ①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 ② 중앙정부 소속기관과 협력
-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1개 세부과제)
 - 실행(1): ①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1)			1	
41. 통합행정체제 구축 (2)			2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1)			1	

점검의견

-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 도의회와 협력 강화 위한 아젠다 조정, 정책개발, 입안을 위한 단계별 협치 프로세스 세분화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의회 정책 지원 자료 목록 문서화로 협치 가이드북화
- 41. 통합행정체제 구축
 - 실무협의회 개최를 늘리고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이용을 확대할 필요 있음.
 - 환경 관련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협력을 노동청 등 더 많은 중앙정부기관들과 협력을 넓히고 강화할 필요 있음.
-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시군 지방정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특정한 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이 조합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을 확대.(예)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아울러 시군과 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총 평

- 도와 의회가 공통 의제에 대해 심층적 이해와 다양한 접근을 위해서 전문가그룹을 초청하여 라운드테이블 등과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도와 교육청이 실무협의를 할 때에는 보다 정확하게 계획 단계, 시행 단계, 평가 단계 등 미션을 정확하게 단계별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 파견 기관과 협력을 전 부서로의 확대를 위해 각 기관별 구체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 협치를 위한 다양한 채널 가동 필요
-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경남지방경찰청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캠페인의 추진 필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구분 필요
- 학생 건강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간 초·중·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건강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도·시·군 간의 실질적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연계협력에 대한 사전계획부터 시도하는 것이 시·군의 협력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봄.
- 광역권 공동사무(예, 지리산권, 남해안권, 낙동강권 등)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추진 가능성 점검 필요, 추진 여부 판단에 따라 지속 추진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만드는 행정혁신

추진상황

-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세부 과제 1개)
 - 실행 (1) : ① ‘공공자원 공유’, ‘도민 중심의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은 시행 중이며 ‘알기 쉬운 재정 정보 공개’ 준비 중임
-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세부 과제 4개)
 - 완료(2) : ②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 ④ ‘서부청사 민원해결’은 종합민원실(행정경제, 문화복지, 국토해양 등 93종) 완료
 - 실행(2) : ① ‘빅데이터를 이용 민원·복지 분석 및 활용’, ③ ‘민생규제 혁신과제와 지역 맞춤형 과제 발굴’ 실행 중임
- 45. 적소 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세부 과제 2)
 - 실행(2) : ① ‘적소적재 인사혁신’, ② ‘성과관리 프로세스 정착 및 운영 패러다임 전환’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 운영 중임
-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세부 과제 1)
 - 실행 (1) : ① 내용에서 유연근무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인사 고충, 민원 청취를 강화하고 있음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1)			1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4)			2	2
45. 적소 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2)			2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1)			1	

점검의견

- 43. 정보공개, 자원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 시군에서도 정보공개, 자원공유 등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시군 순회 전시도 함께 기획할 필요 있음
 - 공공데이터 개방 시군 공모 사업 등을 통해 확산을 검토할 필요 있음

-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 도민도 빅데이터 생산 주체이므로 도민들이 원하는 빅데이터 분석도 조사할 필요와 공공기관, 시군, 유관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함.
-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에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여부 점검 필요함.

- 45. 적소 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 개발된 지표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도민의견 청취 : SNS 온라인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

-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 유연근무제의 실태(신청 공무원의 성별, 연령대, 사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화 및 유연근로제에 대한 공무원 만족도 조사 필요.
- 과제목표인 '양성평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실적 점검과 인사 고충상담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피드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필요함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공무원 유연 근무제, 공공 정보공개, 규제 혁신 등 경남도에서 시행하여 효과와 만족이 증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서부청사에 있는 종합민원실을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여야 함.
- 양성평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내 공무원들의 조직내 성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
- 도에서 민간 등에 요청하는 서류, 증명서 관행 변경할 필요 있음.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같은 조건을 없애야 함'.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서부청사 민원센터에 경남1번가 분소의 역할, 기능 추가를 검토

- 신규 제안 과제

- 유연근로제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52시간제 적용
- 경남도청 내 심신안정센터 설치, 운영

제3부

6대 중점과제 점검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과제추진 상황

- 재원조성,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핵심산업고도와, 스마트 산단 및 스마트 공장 등의 과제 등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인프라 구축 착수 등). 다만 국비 추가적 확보에 따른 도의 재정 부담,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 필요
-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6.19) 이후 사업화 진행의 기본 방향 불분명
- 이 외에는 기존 주력산업과 ICT융합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자체 역량 부족 및 경남 주력산업 구조적 모순과 타 지역 대비 기업의 관심도 저하로 전체적인 혁신 성장 동력은 부족한 상태 ⇒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과제나 분위기 조성 필요

과제점검 의견

- 1주년 점검시 신규로 제안하였던 2개, 즉 경남 신성장산업 전략기획단 신설(전략산업과)와 경제혁신 전략 기획단(T/F) 구성(신산업연구과)의 과제 모두 미반영
 - 미반영 근거로 제시된 현행 기구, 즉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 TF의 기능에 대한 평가와 이들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점검위원의 다수가 현재의 경제혁신추진위의 위상이 약화되었고, 또 각 위원회가 유기적 연계가 없다는 지적)(경제혁신전략기획단)
 - 전략기획단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TP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HQ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 TP위상, 한계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신성장산업 전략 기획단)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분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1주년 점검의견) 현장방문, 연구과제 수행과 더불어 ①분과에서 제기된 의제들을 도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 ②유사기능을 하는 타 위원회 등과 협의 등을 통한 정책형성과정이 필요
 - * 예를 들면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총 8,000억원 규모, ‘21~‘27년, 본예타 진행 중(‘19.5월 기술성 평가 통과)) 등에 대해 중앙정부 지침보다는 자체 전략 수립 후 대응 필요
-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립 과제가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 플랫폼 구축”으로 변경을 경남도정 자문위가 동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과제는 동일하게 남아 있음.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 상 플랫폼 구축 정도로 진행하지만, 이 사업 역시 진흥원 설립의 전 단계로서 경남TP를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타 지역에 비하여 정보산업진흥본부 내 인력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로 현재 사업 관리에 급급한 실정임.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서 관련 SW산업을 육성하거나 신산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관련 인원 대비 50% 이상 증원 필요
- SW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며 창업 성공성이 높은 산업 분야로써 제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 동시에 SW산업 자체를 육성 할 필요가 있음 - 인접 부산광역시에는 성공 기업 사례가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상황 - 고용 효과 극대화, 지식산업에 따른 고급 일자리 홍보 가능
- SW산업진흥을 위한 기존 조직(TP)의 역할(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지역R&D역량 강화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스마트공장 공급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관리 지침 변경에 따라 2022년까지 당초 사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조 장비 구매 허용, 중소기업의 생명 연장 및 생산시설의 정부예산 투입 등으로 인하여 향후 WTO 규정 위반 등의 문제점 내포
- 스마트공장 공급 사업의 본 취지와 어긋나고 있는 상황 - 자동화 장비 보급 이외에 궁극적인 스마트공장을 위한 제도 데이터 수집은 사업성과관리 운영 지침에도 없는 상황
- 도 차원의 중소기업벤처부에 건의를 통하여 스마트공장공급사업의 본질적인 사업 목적으로 전환 시도 필요. 사전진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업체별 유형에 따라 수행 사업의 다각화 필요
- 가) 스마트공장 공급 모든 사업에 데이터 확보 관련 성과목표 추가 필요
- 나) 임가공업체: 제조장비 개선, MES, POP, 예지보전 시스템 사업 권고, ERP 설치 사업 지양
- 다) 설계능력 보유 업체: 모든 사업 지원 가능
- 라) 매출액 100억원 (혹은 2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제조데이터 확보 및 관련 분석 사업만 추진 권고
- 마) 대형ERP업체의 스마트공장공급사업의 참여 지양 방안 마련 필요 - 영림원, 더존 등
※ 사유: 임가공업체 및 단순 제조업체는 원가 결정력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ERP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저하 - 상세 점검 필요
- 사전진단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지속적인 관련 인원 확보 필요 - 2019년 추진 사업 중 절반만 사전진단 활용
- 공급업체의 사전진단제도 무용론 유포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공급업체들이 수요업체 관련 내용으로 설득하여 사업 추진 시도 사례 정보 획득

- 스마트산단 추진 사업

- 현황: 사업단 선정 및 2020년 예산 확보 등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
- 스마트 산단 사업단 추진에 따른 도 차원의 추진 전략 검토 필요
 - 가) 대부분 사업 및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 발표된 언론 홍보 (매년 8천억~1조)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나) KETI 유치 후에 확보된 2019년 예산의 지역 기업에 대한 수혜 방안 마련 검토 필요
 - 산단에서 추진할 때에는 지역기업과 협업 모델을 발굴했으나, KETI로 추진주체가 바뀐 후에는 지역기업의 참여나 관련 사업에 대한 수혜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중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1-2-③,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1-1-2-⑤)의 경우, 지속적인 자원 확보가 필요함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자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실행조직 및 거버넌스 개편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11월 초에 중기부 및 산업부에서 빅데이터 센터 관련 업무 조정이 끝나 스마트 산단 이외에 모든 데이터는 중기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 (스마트 산단도 2년 후에는 관련 데이터 이관)

- 빅 데이터는 데이터 주도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경남도가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엣지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초기에는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임계점이 넘어가면 독점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는 추세
- 그러므로 경남도는 ICT·SW 전담 기관인 경남TP 정보산업진흥본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사업 추진 필요 ⇒ 보관 데이터 용량의 임계점이 넘어가면 경남도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가능, 경남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사업 추진 필요

- 스마트인력양성의 경우 재직자 교육 관련 예산(도비 4억원)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 이는 미취업자, 대학생 대상 교육사업과 재직자 중심의 도 사업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도 판단. 따라서

- 스마트핵심인재 양성 컨트롤 타워(장기대책으로 명시)를 시급하게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모색, 양성된 인력의 활용방안 강구
- 스마트인력양성 사업 추진 모니터링 결과(10월 예정) 정보 공유, 또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경제혁신추진위, 자문위와 공동으로 의견청취 및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신규 제안 과제

- 지역산업 위기대응 TF 신설: 핵심산업 고도화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발, 이를 위한 기초자료와 분석, 평가,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한 시스템 혹은 전담 조직(지역산업 위기대응 TF팀)을 경남연구원 내에 설치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과제추진 상황

● 도민청원제도(온라인 플랫폼 출범)

- 프로세스 : 제안 -> 공감(30일 안에 100명 이상) -> 찬반토론(20일 동안 300명 이상 참여자 중에 과반수가 찬성) -> 심의(공무원 14명, 주민참여예산위원 65명 등 합 79명 도민제안협치위원회) -> 실행
- 2019년 10월 30일 온라인도민 참여 플랫폼 출범하여 12월 15일 현재 17건이 진행 중이고 28건이 종료되었음. 28건 모두 1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지 못하여 찬반토론으로 넘어가지 못하였음.
- 이외에 7월 23일 어르신 정책토크 <어르신 공감 토크콘서트>, 7월 23일(중부동부권, 김해), 30일(서부권, 진주) 등 양일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토크>, 11월 22일 <다문화가족 정책콘서트 톡톡톡> 등을 통해 도민들이 제안하는 행사를 가짐.

●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사회적 대타협 실현(추진상황 II-2-23-① 참조)

-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위원 수를 21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노동현안별 분과위원회도 3개에서 4개로 확대하였고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14회 개최함.
- 제언 ; 민간차원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이 공제를 통해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고, 대리 기사, 택배기사 등의 쉼터 등을 함께 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의 공동개발과 적용(추진상황 III-3-45-② 참조)

- 1년 동안의 준비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지표(총 610개 성과지표 중 370개)를 적용하고 있음.
-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변한 사회적 가치 반영 성과 지표 적용상에서 오는 문제, 개선 방향 등을 논의.
- 개선주요업무계획에 사회적 가치 반영 지표를 연계하여 실무, 현장 적용을 높이고자 함.
- 평가 대상을 4급 이상으로 변경해 성과관리 역량 집중하고 성과면담제 강화하여 상하 소통 높임.
- 제언 ; 사회적 가치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적 전략이므로 꾸준하고 지속적 점검과 보완이 필수적임. 특히, 공직사회에 일회성이 아니라는 메시지 전달 필요.

아울러 평가에 있어서 단순히 수치적 보고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성과를 정확하게 끌어내는 평가를 하고 사회적 가치를 업무에 연결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이행 경로, 맵을 만들 필요 있음.

● 사회혁신 추진상황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의령군이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시작하면서 동네 빨래방을 포함하고 경남농협이 이불빨래 봉사 활동 참여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함.
- 2019년 9월 23~27일 "우리는 더 나은 길로 간다"는 슬로건으로 경남혁신주간으로 진행하였음. 9월 25일은 기초 시군의 혁신 사례 발표가 있었고, 9월 27일은 시민 사회가 제안한 사회혁신 아젠더 19개를 채택하여 진행하고 있음.
- 경남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에서 사회혁신가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사회 혁신이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되며 관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 제언 ; 도민 청원 제도의 본격적인 가동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기존의 홈페이지에 있는 도민 설문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조사에서는 시계열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새로운 조사 항목 추가 필요 있음.

■ 과제점검 의견

- 경남의 도민들이 도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함.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 등을 활용하고 도정을 알리는 마케터(일명 소통마케터) 운영 검토.
- 노사민정협의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세미나, 포럼, 원탁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테이블 마련
- 사회적 가치가 18개 시군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12개 혁신가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먼저 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필요.(간담회, 포럼, 워크숍 등)
- 사회혁신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함께 기존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 필요함. 특히, 전통적인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함께 연구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시민단체 청년 실무자 인턴을 1년 이상 운영 또는 청년부흥프로젝트를 시민사회단체에 개방.

서부경남 KTX신성장 경제권 구축

과제추진 상황

- 혁신도시 시존 2의 성과로서 입주기업이 2016년 10여 개, 2018년 말 176개, 2019년 현재 435개로 증가, 고용창출 인원도 1,800여 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 클러스터 입주기업 임대료 및 이차지원 사업에 '20년 사업비 9.4억원 편성
- 2019년 제1회 혁신도시 성과 보고대회에서 혁신도시 종합평가, 정주여건 개선, 상생발전 부문 3개 분야 4개 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2019.12.11.)
- 항공ICT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2019. 6.)으로 항공국가산단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성장 경제권 구축을 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과제점검 의견

- 서부경남 KTX의 경우 조기착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조기 이행 필요하며, 동시에 고속철도의 안전 운행 및 항공·조선산업 활성화에 따른 물류 이동 증가에 대비하여 김천~진주 간 복선 건설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 조성 필요
- 서부경남 신성장 상생기금 조성 추가 제안에 대한 의견 재고
 - 미반영, 미반영 사유는 혁신도시법 기금조성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국토부, 경남도, 진주시, 이전공공기관 등 협의, 법령개정(지방세 부담비율 확정), 이해관계 조정 등 중장기적 검토 필요
 - 그럼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고, 다양한 수준에서 해당 기관들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상남도가 기초지자체(진주시) 상위기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경남 신성장상생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규 과제로 제안
- ‘혁신도시 시존2는 그간 특화산업(항공우주) 시업유치 및 산업지원 중추도시 육성이라는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2019.6)으로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추는데 지역 거점대학의 역할이 미흡. 즉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특화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 항공우주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 필요

■ 신규 제안 과제

- **경남 신성장상생기금 조성:** 점검 1주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서부경남 신성장상생기금을 경남신성장상생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 제안 필요, 즉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은 국토부 소관이기는 하나 관련 예산 책정은 없는 상태이므로 혁신도시 개발이익공유제를 활용 가칭 ‘경남 신성장상생기금’ 조성하여 혁신도시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구축 관련 사업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진주시·사천시·고성군·관련 기업 공동펀딩(국가 재정 매칭)으로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지원
 - 경남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가 크게 증가한 진주시의 기금 참여
 - 개별적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관련 펀드의 통합적 관리 운영
 - 제조업과 농업, 항공대기업과 협력업체, 진주시와 사천시, 노인과 청년 상생자금 활용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서부경남)구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상생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과제추진 상황

- 강소연구특구 3곳 지정,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 업무 협약(9.2),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12월)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삼성SDS, 프랑스 다쏘 시스템 등 대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이전 등 대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재료연구원 승격도 공감대가 상당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

과제점검 의견

- 제조업 혁신,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등 스마트 경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가?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그것이 TP가 되었든 아니면 대학이 되었든)
- 연구기관 유치 관련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 본부 유치의 장단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음(KETI로 추진주체가 바뀐 후에는 지역기업의 참여나 관련 사업에 대한 수혜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중), 또한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은 기존처럼 내주화나 외주화냐를 고민하기보다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더 많은 참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이자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
-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상 플랫폼 구축 정도로 진행하지만, 이 사업 역시 진흥원 설립의 전 단계로서 경남TP를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SW산업 진흥을 위한 기존 조직(TP)의 역할(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지역R&D역량 강화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관련하여 제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R&D, 제품개발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R&D 투자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은 센터가 설치된 TP 자체적으로 수행(물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지만)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제기가 필요
- 포럼 제안: 기본 방향으로서 R&D 사업 관련 과제들이 “지역 R&D역량 제고”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논의하고 평가해보는 토론이나 포럼 형식의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남도에서 올해 사업 종료 후에 1월 중에 일정을 마련할 필요)

■ 신규 제안 과제

- 지역 중심의 R&D체계혁신을 통한 지역 新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R&D역량이 높아져야 하며, 이런 점에서 **R&D 기획 및 관리 등을 포함한 경상남도 차원의 전담 조직(기관) 설립이 필요**
 -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진단(위원회 구성과 기능, 역할 등), 이와 연계하여 지자체-대학-지역 내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구조 구축,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
 - 향후 지역R&D사업의 확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 전략 기능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경남TP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
 - 동시에 경상남도 차원의 R&D 기획 및 관리 등을 포함함 경상남도 차원의 전담 조직(기관) 설립 관련 R&D계획인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지역-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과 잘 연계하는 것이 중요
- **엣지데이터센터 건립**
 - 2019. 11월 초 중기부 및 산업부에서 빅데이터 센터 관련 업무 조정이 끝나 스마트 산단 이외에 모든 데이터는 중기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스마트산단도 2년 후에는 관련 데이터 이관)
 - 빅데이터는 데이터 주도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경남도가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엣지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초기에는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임계점이 넘어가면 독점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는 추세
 - 그러므로 경남도는 ICT·SW 전담 기관인 **경남TP 정보산업진흥본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사업 추진 필요 ⇒ 보관 데이터 용량의 임계점이 넘어가면 경남도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가능, 경남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사업 추진 필요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과제 추진 상황

“로컬푸드 공공급식 정책과 푸드플랜의 시군확대” 진행중

- 경남(김해)-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확정
-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남 첫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센터 선정
-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안건상정(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형성)
- 부울경 광역푸드플랜 추진 실무협의회(부산시청, 울산시청)
- 먹거리위원회 분과별 회의(19회)와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 4개분야 15개 과제 100대 실행사업 검토 / 먹거리 전략 비전, 정책목표 확정
-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 관계기관 2차회의(공공기관, 로컬푸드매장)
 -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공급 예정('20년 상반기)
- 경상남도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농업기술원) 개최
- 먹거리위원회 전체회의(먹거리2030혁신전략 확정) 개최

< 경남 먹거리 2030 혁신전략 비전 및 정책목표 >

- 비 전 : 먹거리 순환과 보장으로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
- 정책목표 : 먹거리 순환-보장 체계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모두가 행복한 좋은 먹거리 만들기
- 혁신전략 : ① 공공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② 먹거리 도농상생 활성화
 - ③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 보장 ④ 먹거리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 4개 분야, 12개 전략과제, 100대 실행사업
- 2024년까지(5년간) 총 1조2,288억원(국비 202억원, 도비 3,991억원, 시·군 4,896억원, 기타 3,199억원)의 사업비 투입 계획

- 경상남도 먹거리 2030 혁신전략 비전선포식으로 도민 홍보 및 확산(11.25)
- 시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2개시군 운영, 5개 신규)
 - 기존: 김해시,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공공급식 범위확대 추진)
 - 신규: 남해군, 밀양시(계획수립 및 공사중, '20년 내 급식공급 계획)
 - 거제시, 고성군, 창녕군 (도비사업 선정, 계획수립 등 준비 중)

- 시군단위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
 - 국비지원 계획수립 중 : 진주시, 김해시, 거창군 ('19~'20)
 - 자체예산 계획수립 중 : 밀양시, 거제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19~'20)
- 조례 및 제도정비
 -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추진
 - 먹거리 통합정보시스템(농식품부 연계) 개발중
 - 경상남도 농정국 조직개편 (먹거리 전담계 1개팀 추가 신설)
- 경상남도 도비 2020년 시범사업 실시
 - 공공급식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 7개소
 - 농촌마을공동체식당 운영, 공동주택 로컬푸드 아침급식 지원

■ 과제 점검 의견

“실행할 체계를 만들고 사람을 배치하는 일” 급선무

- 『경남 먹거리2030혁신전략』 ‘실행’체계 구축
 - 세부과제 실행을 위한 담당부서의 역할 확대 필요(기획 및 실행 구분), 먹거리위원회 운영 혁신을 통한 기능과 역할 재조정 필요(회의 중심이 아니라 실천과 성과 중심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
 - 경남도 농정국외 (복지,보건,교육,환경,일자리)등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 * 부지사(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주관 행정TF 등 실무추진·점검 체계 가동 본격화 필요
- 부울경 광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과정에 민간의 참여 보장이 거의 없음,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트워크 구성과 지속적인 포럼 등의 운영으로 부울경 도민, 시민들의 인식 제고 필요
-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중소 규모의 로컬푸드 조직과 공공기관 간의 협약 조건 등이 다소 불합리한 점이 많아 적정 이윤창출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애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보임. 먹거리 정책을 통한 디딤돌 역할 보다 진입 장벽 등으로 걸림돌 우려
- 시군과 경남도의 먹거리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공유회 개최 등이 필요해 보임

■ 총평

- 2019년은 계획과 실행 초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2020년은 먹거리 분야의 혁신사례, 민관협력형 모범사례 등의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시기임. 도민들의 인식에도 농정의 틀 전환,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 의제의 전면화라는 국정 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어야 하는 강력한 민과 관의 협치조직과 실행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다소 부족함이 역력함. 농정거버넌스인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와 먹거리위원회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동사무국 체제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농업의 생산주체가 가시적 성과에 기대감을, 소비주체인 도민이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점차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요구됨.
-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조례’ 상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위원 추가선임
 - 농어업특별위원회와 연계하여 위원회 사무국 역할 전담자 배치 필요(행정부서내 전담자 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 경남도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역별 의견수렴
 - 도민대상 홍보 및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창구 활성화(경남사회혁신플랫폼 참고)
 - 시군 푸드플랜 추진 모니터링 실시(먹거리위원 참여, 시군 로컬푸드 지표개발)
 - 경상남도 먹거리포럼(토론 네트워크 기능) 실행 (*현재 예산 미반영)
 - 실행영역별 주요 단체별, 시군별 설명회 및 의견수렴 실시

저출생 총력 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과제추진 상황

-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2021년 밀양시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 거창권, 통영권은 적십자 병원 이전 및 신축, 진주권은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공공의료 확충 방안 결정 예정
 -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 및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연구 용역 진행
 - '20. 4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 참여 추진

과제점검 의견

- 공공산후조리원은 밀양 설치 후 평가를 통하여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에 중점과제에서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진주권 공공보건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의 합리적 설계 및 진행 필요
 - 진주권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관련된 공론화 의제 속에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혁신추진단과 보건의료노조·도민운동본부 간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는 추가 비용 및 다양한 영역의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상남도 자체 대안 및 부산광역시와의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 있음.

총평

- 현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는 진주권을 공공병원 신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을 전제한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시 부산광역시의 어린이 재활 환자들의 이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산광역시와의 재정분담 협조체계 구축은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 있음.
- 시군, 읍면동 단위의 보건의료인프라 확충과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사업의 체계적 연계
 - 시군, 읍면동 단위의 보건의료인프라 확충사업의 기대효과는 건강정책에서의 주민참여 기전 체계적 구축, 보건과 복지 서비스 연계, 풀뿌리 단위에서의 주민건강관리 인프라 강화임.
 - 이는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시군 및 읍면동 단위의 수평적 연계체계로서 자리매김 해야 하지만 현재는 불균등적이고 분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자치행정국 행정과,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복지정책과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의 맥락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해야 함.
 - 동시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영역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는 경남사회서비스원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내용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건과 복지부서 간 합리적 역할 분담에 근거한 사업 추진을 시행해야 함.
- 보건지표의 질 개선 및 자체 근거기반 확충을 위한 ‘경남 보건의료패널 조사’ 실시
 - 경상남도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지표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필요
 -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조사 전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나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지표를 생산하여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검토 필요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특화된 근거기반 확보 필요
 - 현 단계에서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남 보건의료패널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제4부

참고사항

1 과제별 전담부서 및 협력부서

46개 과제

목표	전략	도정과제	전담부서	협력부서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산업혁신과	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사업 확충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3	R&D 체계 혁신과 광역연구플랫폼 구축	신산업연구과	산업혁신과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항만물류과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6	서부경남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신산업연구과	전략산업과 서부정책과 항노화산업과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창출			
	7	청년일자리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창업혁신과	일자리경제과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경제과	여성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인복지과
	9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과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과
	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일자리경제과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추진단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농식품유통과	
	1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친환경농업과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17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 농정 실현	농업정책과	해양수산물과
	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해양수산물과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통합교육추진단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청년정책추진단	건축주택과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지원과	
	22	지역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증진	보건행정과	장애인복지과

목표	전략	도정과제	전담부서	협력부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23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정책과	노인복지과 인사과 예산담당관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여성정책과	
	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복지과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28	낙동강 수질개선	수질관리과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문화예술과	
	31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체육지원과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관광진흥과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도시계획과	
	34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35	수요자 중심 광역교통체계 확충	교통정책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36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안전정책과	통합교육추진단 재난대응과 예방안전과
함께 여는 혁신 도정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행정과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사회혁신추진단	정책기획관 감사관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공보관	건축주택과 서부정책과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41	통합교육행정체계 구축	통합교육추진단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외협력담당관	행정과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인사과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법무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건설지원과 서부민원과
	45	적소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인사과	정책기획관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행정과	인사과

6대 중점과제

중점과제명		전담부서	협력부서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항노화산업과 서부정책과
2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회혁신추진단	정책기획관 행정과 인사과
3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4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신산업연구과	산업혁신과
5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농식품유통과	
6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정책기획관	보건행정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지원과

2 2019년 제안 과제(32건) 반영 현황

이행과제 반영 : 9건

연번	이행과제	제안 내용
1	사회적경제 활성화	◦ 경남 사회적경제육성 전략기획단(T/F) 신설
2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조례제정 ◦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3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 청년정책플랫폼 구성 ◦ 경남청년 축제(박람회, 토론회 등) 개최
4	청년터 조성	◦ 청년복합센터 건립(생활SOC사업과 연계)
5	도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질 관리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6	생활체육 활성화	◦ 경남 방문 스포츠팀 유치 지원센터 설립
7	열린 관광 1번가 조성	◦ 관광진흥재단 조직 확대 및 타 시도 조직 기능 추가 연구 ◦ '경남관광품질인증제'와 '서비스품질 보증제' 도입 ◦ 세고를 최첨단컨벤션센터로 조성
8	도시재생 활성화	◦ 스마트시티 유치자문단 구성
9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 개통	◦ 경전선 고속철도화(남해안고속화철도 연계)

기 추진 중 : 7건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	경력 없는 여성지원 프로그램 신설	◦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인턴인센티브 확대' 지원 사업에 경력단절 여성과 함께 포함하여 지원 중
2	젠더전문가 채용 배치	◦ '여성특별보좌관'을 젠더 자문관으로 활용 중
3	경상남도 주민참여조례 제정	◦ 주민참여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제·개정 추진 중 (→ 완료 즉시 조례 제정 추진)
4	경남체육회관 건립	◦ 경상남도 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 중('17.7월~'19.12월)
5	경남 가야문화복원 및 관광자원화 마스터 플랜 수립	◦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19.5월~'20.5월)
6	농산물 조사분석의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 주요 농산물 생산실태 및 분석 시 농촌경제연구원(KERI)·대학교·농식품부·농업기술원 등 협력체계 구축·운영 중
7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지원 확대	◦ 2020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경남 유치에 따라 예산지원(도비 2억원) 계획

■ 중장기 검토 : 6건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	'경남 정책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 지원 및 '완전히 새로운 경남' 미디어 센터 조성	◦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22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이며, 완공 시점에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2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에서 공공건물 담장 허물기, 유휴 공간 시민개방	◦ 학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 개방하였으며, 추가 개방 필요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대 추진
3	경남 문화예술도시 재생 지원단 설립	◦ 道,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기관(LH, 경남개발공사), 관련 전문가 등 유기적 결합 구조 필요
4	주요 관광지 관광경찰도입	◦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운영 시 연계 추진 검토
5	공익형직불제 관련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농촌형 활동가 양성(일자리) 단초 마련	◦ 공익형직불제로 농촌형 활동가 양성사업 가능 여부 검토 후 추진(현재 공익형직불제 사업범위에 미포함)
6	수자원관리과 신설	◦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맞추어 道 물관리 조직개편 필요성과 인력증원 등에 대해 협의 및 검토 중

■ 미반영 : 10건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	경남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조례 제정	◦ 장소선정, 설치·운영 등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2	정보·민원·홍보와 관련된 조직의 통합개편	◦ 정보·민원·홍보 관련 기능의 조직 통합 개편은 규모 및 업무 효율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 어려움
3	경남 신성장산업 전략기획단 신설	◦ 산업간 연계, 대외기관 대응창구 단일화, 기존 협력체계 활용 등을 위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4	경제혁신 전략기획단(T/F) 구성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지역혁신T/F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경제혁신 전략기획단" 구성은 기능 중복
5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추진 어려움
6	국립 남부건축·디자인센터 구축	◦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관련 계획 없으며, 공공건축가제도 활용하면 건축 및 도시공간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7	공공체육시설 18시간 운영개방	◦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통상 06:00~22:00까지(16시간) 운영 중이나, 이용도 낮은 2시간 추가개방 현실적 어려움
8	서부경남 신성장 상생기금 조성	◦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서부경남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맞지 않으며, 기금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님
9	항노화주식회사 청산 및 웰니스 관광센터 설립	◦ 상법, 출자출연법 등 관계 법령 상 해산(청산) 요건 미충족 ◦ 항노화(주), 사업 다각화로 경영안정화 모색 중
10	녹조발생시 상수원수 및 수돗물 조류독소 평가단 발족	◦ 최근 5년간 정수된 수돗물에서 조류독소 검출사례 없어 별도 평가단 구성 무의미

3 도정자문위원회 신규제안과제 (2020. 1월)

목표	전략	신규제안과제
목표1	전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위기대응 TF 신설 ◦ 경남 신성장상생기금 조성 ◦ R&D 기획 및 관리 전담 조직(기관) 설립 ◦ 엣지데이터센터 건립
	전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 지원 ◦ 소상공인·창업자를 위한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추진체계(농어업특별위원회, 먹거리위원회) 일원화위한 TF팀운영 ◦ 농촌활동가 육성 및 발굴을 통한 경남형 농촌일자리 발굴
목표2	전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표의 질 개선 및 자체 근거기반 확충을 위한 ‘경남 보건의료패널 조사’ 실시
	전략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실현위한 부서별 젠더정책 담당관제 실시
	전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총량제에 대비한 면오염원과 선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사업 실시 ◦ 난분해성 물질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4단계) 실시 대비 도 차원의 연구조사 사업 실시
	전략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사 교육과정 도입 ◦ 18시간 공공체육시설 운영 ◦ 동남권(부울경), 남해안권(전경부) 지역학 공동 연구
	전략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남부 건축·디자인센터 구축 ◦ 남해안 고속철 전담팀 운영 ◦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 품질검수단 서비스 시행
목표3	전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조례, 주민참여정책제, 민주시민교육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등 ◦ 도민 추천 개방형 임용제 확대 ◦ 방통위 미디어센터 연계 ‘경남 정책 시청자 수용프로그램’ 지원 및 ‘완전히 새로운 경남’ 미디어 센터 조성 ◦ 서부청사 행복화원, 서부경남의 상징적 정원 혹은 남명학을 연계한 개념 정원으로 조성
	전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52시간제 적용 ◦ 경남도청 내 심신안정센터 설치, 운영

4 도정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개요

- 근거 :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4.4.3)
- 위원임기 : 2년 (2018. 11. 15. ~ 2020. 11. 14.), 연임가능
 - 단, 위원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잔여 임기
- 주요기능
 - 도정4개년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 제안
 - 주요 도정의 추진방향,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위원회 구성

- 구성 : 29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 50명 이내로 구성
 - (위 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운영·기획위원회 : 위원회 활동방향 설정, 보고서 내용 정리 등
- 분과위원회 : 4개분과(경제혁신, 민생, 문화복지, 사회혁신)
- 운영실적 : 37회(전체회의 3, 운영기획위 13, 분과위 21) * '19. 12월말 기준
 - 2018년 : 3회(전체회의 1, 운영위 1, 분과위 1)
 - 2019년 : 34회(전체회의 2, 운영기획위 12, 분과위 20)
- ※ 기타 : 개별면담 22회(도지사 6, 행부 8, 경부 8), 시군 간담회 4회, 세미나 1회

주요 활동내역

- 2018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 '19. 1월
- 2019년 1/4분기 추진상황 점검 : '19. 4월
- 민선7기 1주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 '19. 6월
 - 신규과제 제안 32건 ⇒ 도정4개년계획 정비
- 2019년 3/4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정비 : '19. 10월
 - 변경 2건 / 도정자문위 신규제안 9건 반영
- 2019년 4/4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 '20. 1월

2020년 계획

- 도정4개년계획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 도정4개년계획 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 : 연중 5회 정도(전체 1, 분과 4)
- 도정4개년계획 정책개발 연구(경남연구원 위탁) : '20. 3월 ~ 6월

■ 위원 현황

위 부 운	원 영 위	장 장 원	
경 제 혁 신 분 과	이은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시원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기획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최덕철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	
	유남현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기획위원)	
	정석찬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	
	조영태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보배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전문위원)	
	조주현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전문위원)	
	지주형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전문위원)	
민 생 분 과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전문위원)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김남길	경상대학교 해양식품생명의학과 교수	
	김훈규	사단법인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박윤정	노무사(기획위원)	
	윤동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전문위원)	
문 화 복 지 분 과	유진상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기획위원)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태영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기획위원)	
	박명덕	전직 경남도청 공무원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운영위원)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어석홍	창원대학교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교수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과 교수	
	진재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동석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김현준	경남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전문위원)	
	문현미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전문위원)	
	양진홍	인제대학교 헬스케어IT학과 교수(전문위원)	
	정규식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전문위원)	
	정필승	인제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과 교수(전문위원)	
	이성기	인제대학교 명예특임교수(전문위원)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전문위원)	
	최현기	경남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전문위원)	
사 회 혁 신 분 과	이한기	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강재규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운영위원)	
	정원각	한국사회적경제 씨앗재단 사무국장(운영위원, 기획위원)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종호	경상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최승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전문위원)	